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2023

2023년 0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목차

I 혁신안 마련 진행경과

II 설문조사 결과 요약

III 의견청취 결과 정리

IV 더불어민주당 조직 진단

V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향

VI 더불어민주당 혁신 세부내용

혁신안 요약

1. 내가 만드는 민주당

-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
- 5) 당원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약속>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 1) D-Voting 시스템 운영
- 2) 당원자치회 지원
-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기능 강화
- 7)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변경

혁신안 요약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 1)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 3) 국회의원 평가결과 10-40%까지 비례감산
- 4)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 5)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 6) 공정경선: 문자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 7) 당내경선 권리당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 1) 16-17세 당원의 초대
- 2)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 마련, 운영
- 3)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 4)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혁신안 요약

5.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불어민주당

- 1) 정책 중심 정당으로의 조직 개편
- 2) 다양한 인력이 정책훈련을 할 수 있는 정당
- 3) 정책허브 민주연구원, 정책보고회 제도화

6.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 1) 2024년 총선 공천 기준, 미래대표
- 2) 2) 국민이 선발하는 미래대표 국회의원.
- 3) 한국사회 미래대응, 미래위원회 설치

혁신안 마련 진행경과

1. 기존 혁신안 분석

2015년 이후
‘김은경 혁신위’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위한 위원회가
6번 결성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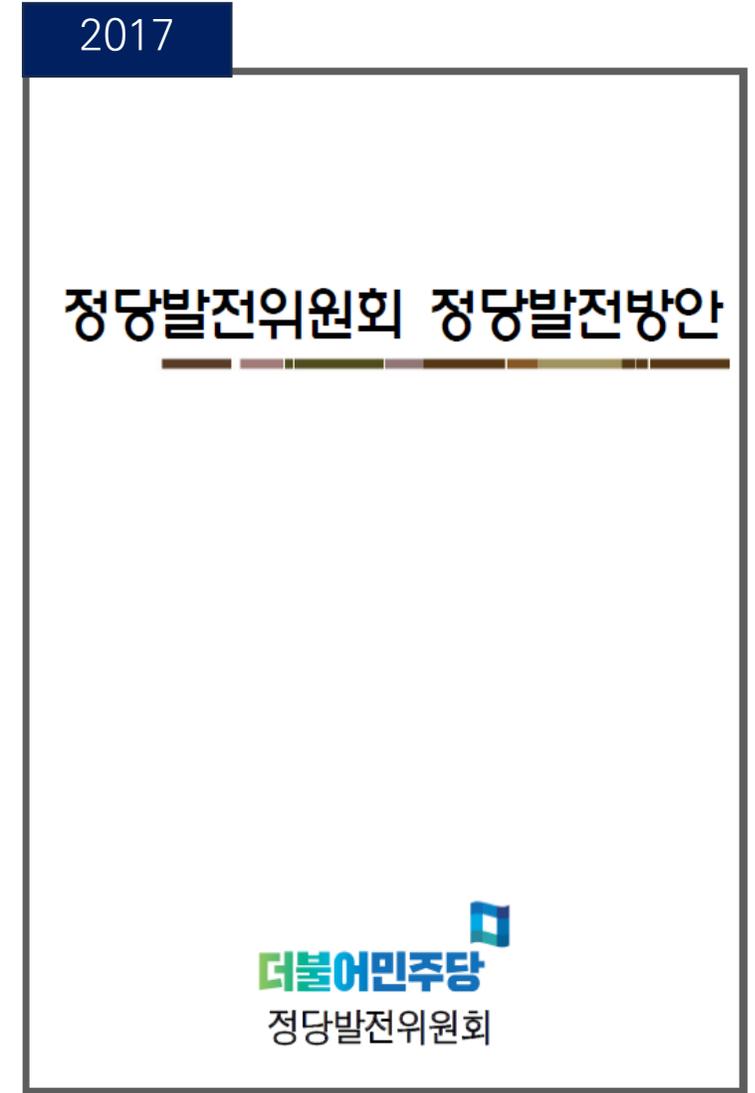
6차례 제출된 당 혁신안을 분석하여
당 혁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결된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2015

(당권재민혁신위원회 활동백서)



■ 발간사 & 인사말	5
발간사 김상곤 당권재민혁신위원장	5
인사말 문재인 당대표	7
■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9
■ 혁신의 길 : 혁신위원회 활동목표와 방향	11
■ 146일간의 혁신위원회 활동	26
■ 혁신위원회 활동후기	32
■ 혁신안 주요내용	48
제1차~제11차 혁신안 주요내용	48
■ 당헌·당규에 반영된 혁신안	62
부정·부패 척결	62
계파패권과 갈등 청산	76
공천 혁신	113
지방분권	142
■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권고사항	147
■ 선출직공의자평가 기준과 방법(案)	152
■ 제1차~제11차 혁신안 발표 전문	156
■ 인사말씀 및 주요발표문	202
■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카드뉴스	301
■ 국민공보안	321



2021

[국회의원 회람자료]

2020더혁신위원회 〈혁신안 종합본〉

2021년 3월 4일(목)

차 례

- 왜 정당혁신인가?
-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3대 혁신 기초
- 무엇을 할 것인가 : 10대 혁신 과제
- 1. 더 민주적인 정당-----3
 - 1-1. 민주적 기반 확대 (지역 / 계층 / 부문)
 - 1-2. 민주적 시스템 강화 (참여와 숙의)
 - 1-3. 국민 눈높이 정치윤리 실천
- 2. 더 유능한 정당-----5
 - 2-1. 정당 주도 국정 비전과 정책 수립
 - 2-2. 정책 역량 강화
 - 2-3. 소통 역량 강화
 - 2-4. 인재 영입과 교육시스템 혁신
- 3. 더 책임있는 정당(혁신 제안)-----7
 - 3-1.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3-2. 의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
 - 3-3. 정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 '대표와 책임의 연계, 책임정당으로 나아갑시다'(책임정당 제안문)-----9



2022_4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활동백서

활동기간 : 2021. 12. 9. ~ 2022. 4. 3.



2022_8월

새로고침위원회 미래비전 리포트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

대외비

2023

정치혁신위
혁신보고서

- 7월 6일 2020년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김종민 의원) 간담회_1차
- 7월 13일 2020년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김종민 의원) 간담회_2차
- 7월 6일 2023년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장경태 의원) 간담회

2. 당원/국민 혁신제안 접수

7월 7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혁신제안을 받았고,

제안내용을
혁신안 마련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의견을 제안해주신
모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국민 혁신제안 최종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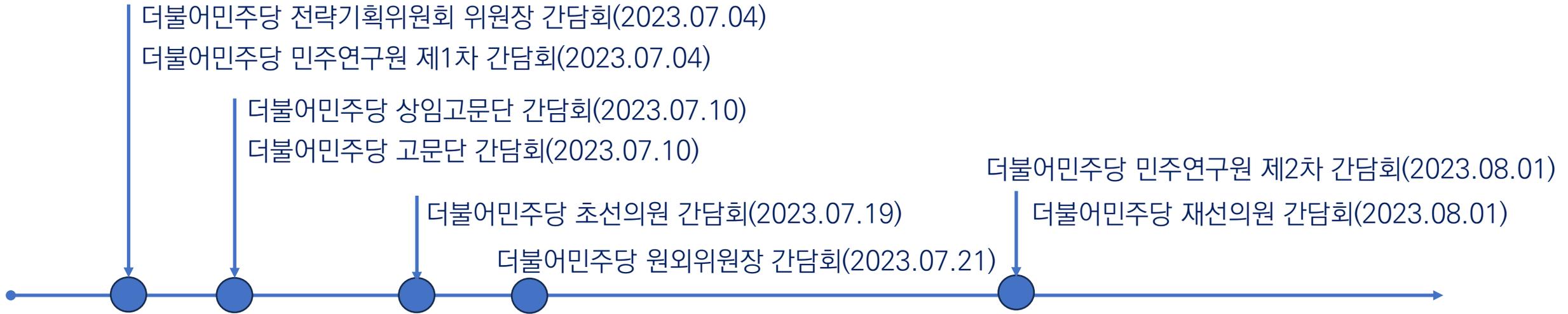
주제 날짜	윤리 강화	정당제도 개편	정당역량 강화	기타	합계
7/7(금)	9	84	15	46	154
7/8(토)	26	357	43	80	506
7/9(일)	11	150	14	58	233
7/10(월)	13	98	21	33	165
7/11(화)	5	82	13	30	130
7/12(수)	7	45	16	22	90
7/13(목)	3	33	6	30	72
7/14(금)	1	39	13	26	79
7/15(토)	4	11	66	27	108
7/16(일)	0	26	3	24	53
7/17(월)	2	22	5	12	41
7/18(화)	7	24	11	20	62
7/19(수)	2	6	3	18	29
7/20(목)	1	6	7	5	19
7/21(금)	1	25	17	32	75
합계	92 (5.06%)	1,008 (55.5%)	253 (13.93%)	463 (25.49%)	1,816

3. 당원/국민 만남

-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이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 2030 청년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국의 당원과 더불어민주당을 아끼는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 혁신안에 반영하기 위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을 하고도 찾아뵙지 못했던 다른 지역의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4.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만남



-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이 ‘당의 전략/노선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및 민주연구원 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이 ‘당의 역사와 정체성 위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상임고문단 및 고문단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고문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초선 및 재선의원, 원외위원장 간담회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5. 국민/당원/의원/당직자보좌진 설문조사

〈당원 설문조사〉 조사기관: T-BRIDGE, 표본: 2,000명, 표집: 권역별 당원구성비에 따른 층화표집, 방법: 온라인조사

〈당직자/보좌진 설문조사〉 조사기관: T-BRIDGE, 표본: 708명, 표집: 당직자, 보좌진 전체, 방법: 온라인조사

〈국민설문조사〉
조사기관: EMBRIN PUBLIC
표본: 3,000명
표집: 지역, 성, 연령별 할당표집
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CATI

당원/당직자/보좌진
설문조사 시행

8월 2-5일

국민 설문조사 시행

8월 6-7일

8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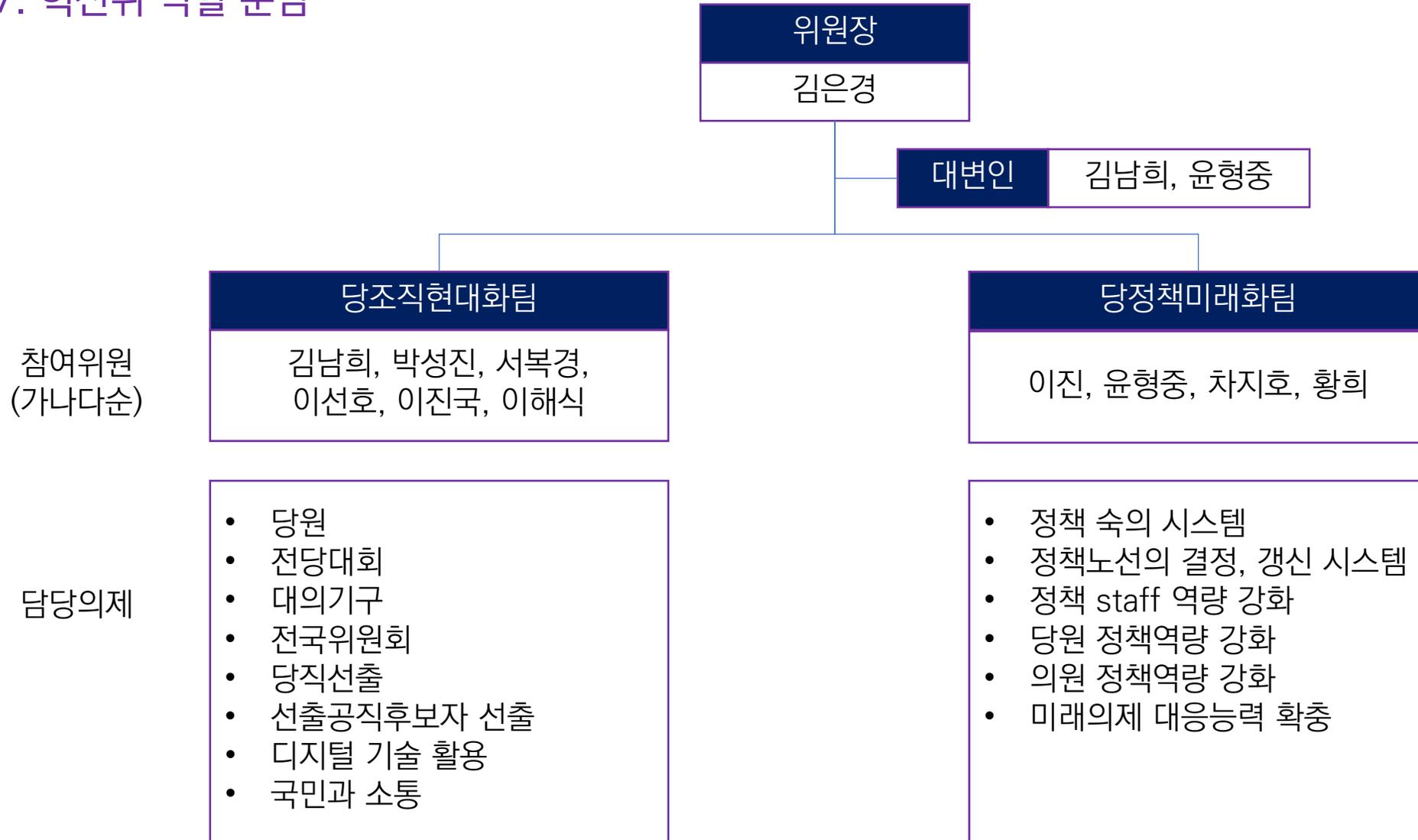
국회의원 설문조사 시행

본 보고자료 작성 시점인 8월 10일 현재 조사결과 미수령 상태입니다.
조사결과 수령 후 관련 내용 추가할 예정입니다.

6. 미래혁신단 활동

미래혁신단 활동이 8월 21일 종료됩니다.
활동 종료 이후 미래혁신단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7. 혁신위 역할 분담



Ⅲ 설문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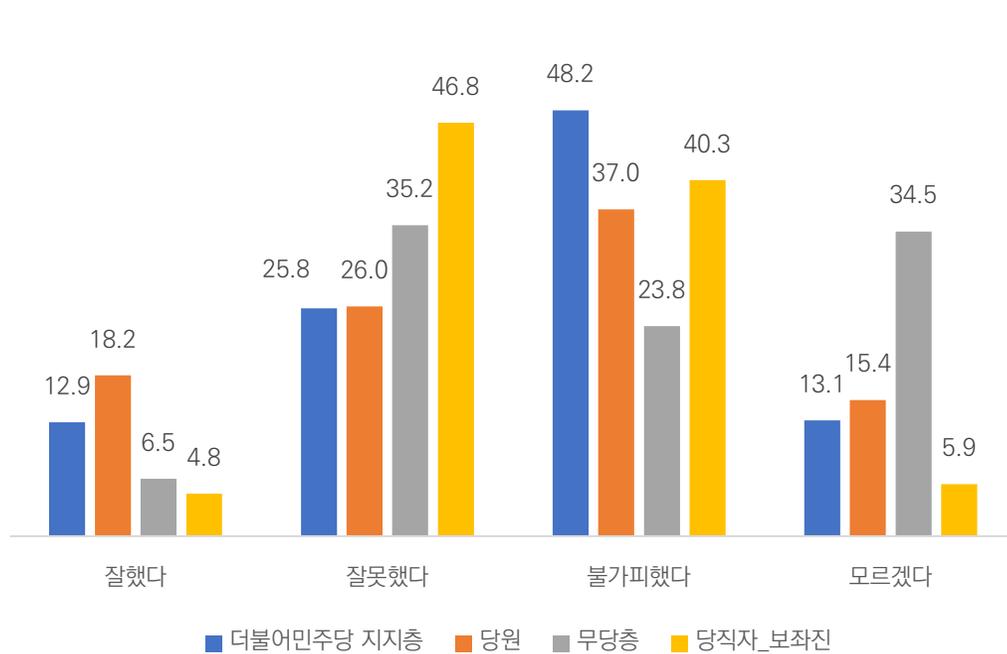
8월 10일 현재,
국회의원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하 국민/당원/당직자_보좌진
조사결과를 요약합니다.

1.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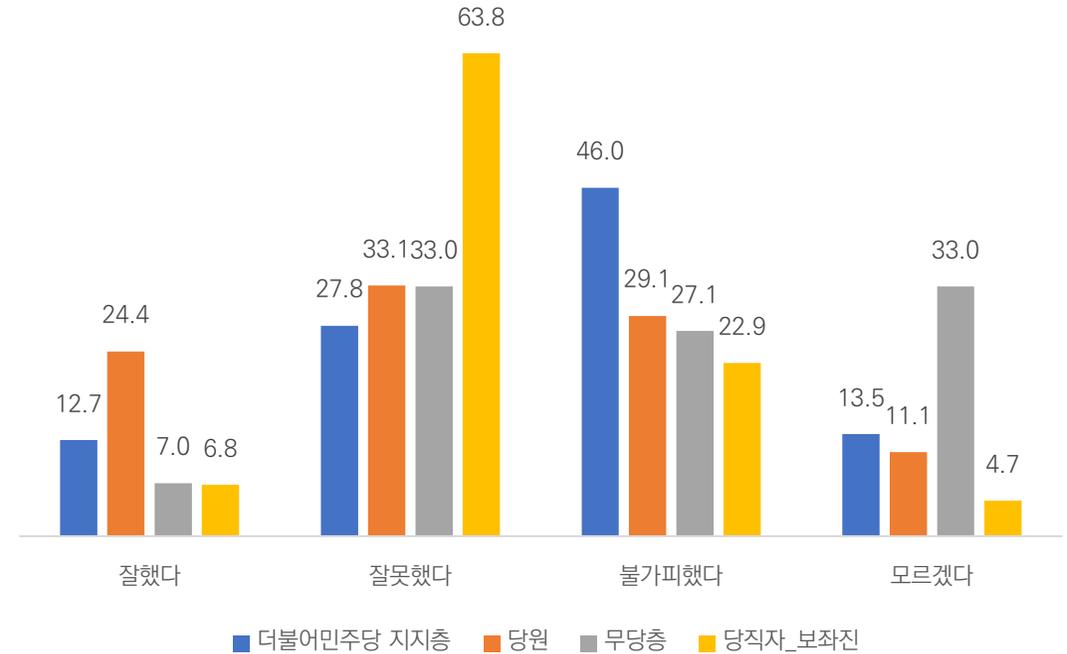
	일반국민	더불어민주당 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보좌진
조사대상	18세 이상 국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보좌진
조사규모	3,000명 (95%신뢰수준 ± 1.79%p)	2,000명 (95%신뢰수준 ± 2.2%p)	708명 (95%신뢰수준 ± 2.8%p)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CATI 방식	휴대전화 이용 웹조사	휴대전화 이용 웹조사
표집방법	지역/성/연령별 층화표집	6개 권역별 당원구성비에 따른 층화표집	대상 전체
조사기간	2023.08.06-08.07	2023.08.02-08.05	2023.08.02-08.05

1.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창당, 2021년 재보궐선거 공천 평가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창당 평가



2021년 재보궐선거 공천 평가



- 더불어민주당 창당에 대해 무당층의 35.2%는 잘못했다, 23.8%는 불가피했다, 34.5%는 판단유보 입장.
-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무당층은 33.0%가 잘못했다, 27.1%가 불가피했다, 33.0%는 판단유보 입장.
- 당원, 지지층에서는 둘 다 '잘 했다'는 입장이 무당층에서보다 2-3배 높아, 무당층과 인식의 괴리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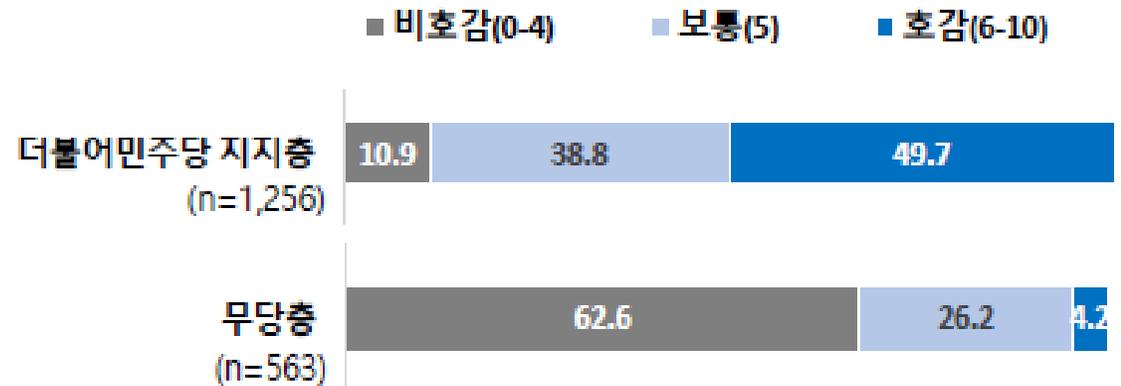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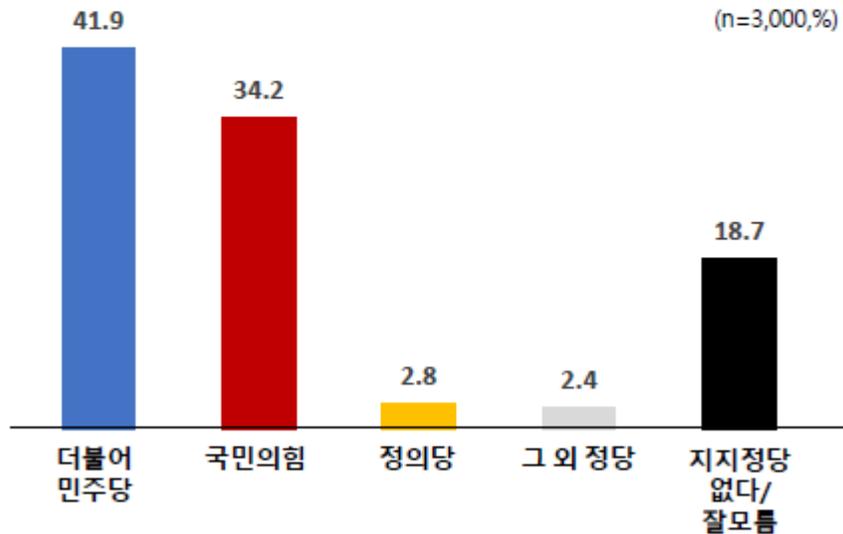
2.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호감도

일반국민조사

- 무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비호감도가 너무 높음(62.6%)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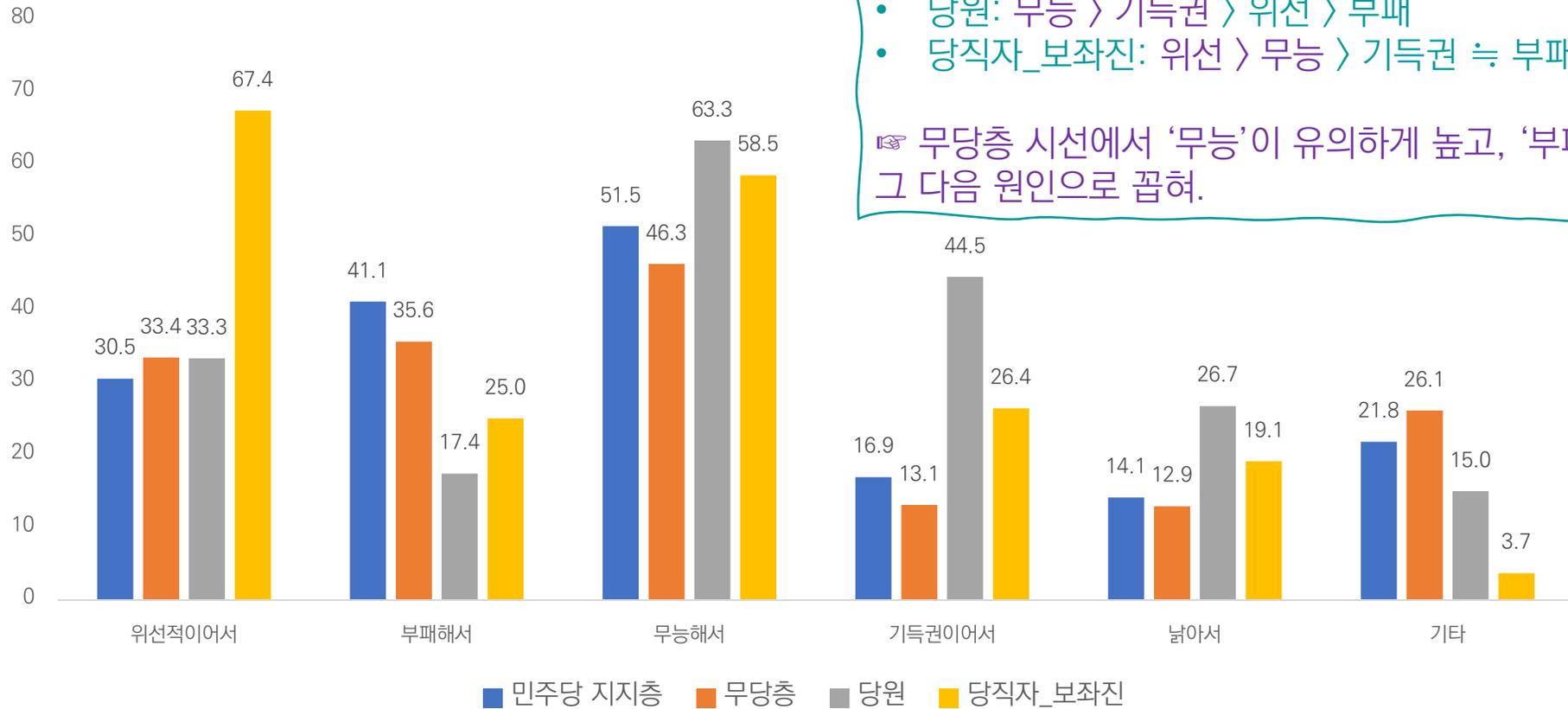
Q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무작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Q1-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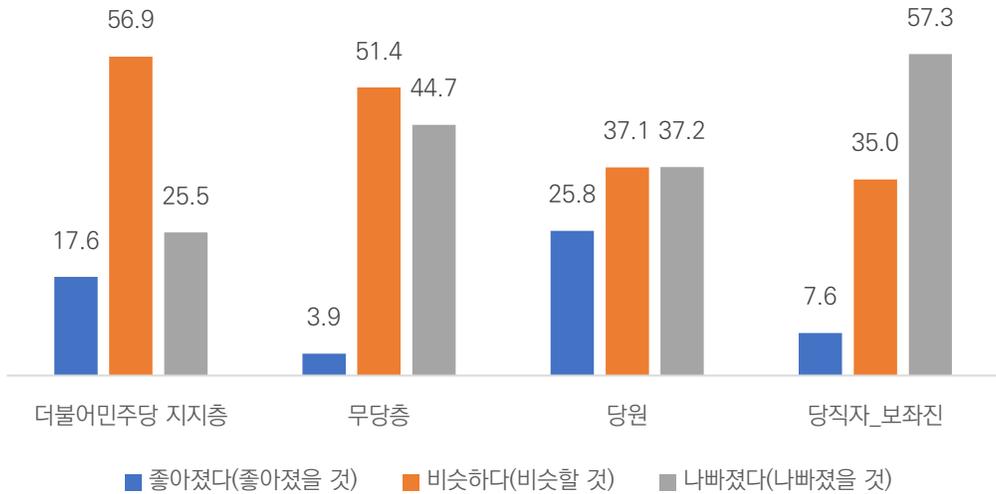
3.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비호감_이유

일반국민(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호감도(0-4)_이유는?
 당원_당직자 등: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비호감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 민주당 지지층: 무능 > 부패 > 위선 > 기득권
 - 무당층: 무능 > 부패 ≒ 위선 > 기득권
 - 당원: 무능 > 기득권 > 위선 > 부패
 - 당직자_보좌진: 위선 > 무능 > 기득권 ≒ 부패
- ☞ 무당층 시선에서 '무능'이 유의하게 높고, '부패'와 '위선'이 그 다음 원인으로 꼽혀.



4. 지난 1년, 더불어민주당 이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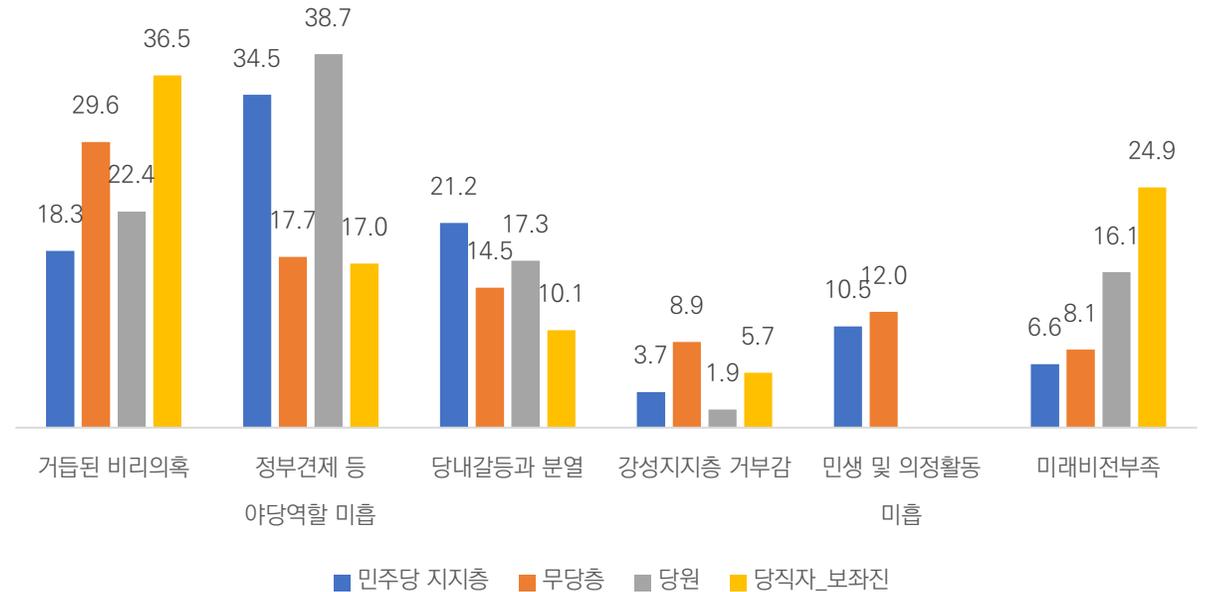
지난 1년 더불어민주당 인식이 나빠졌다(나빠졌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5.5%
- 당원: 37.2%
- 무당층: 44.7%
- 당직자_보좌진: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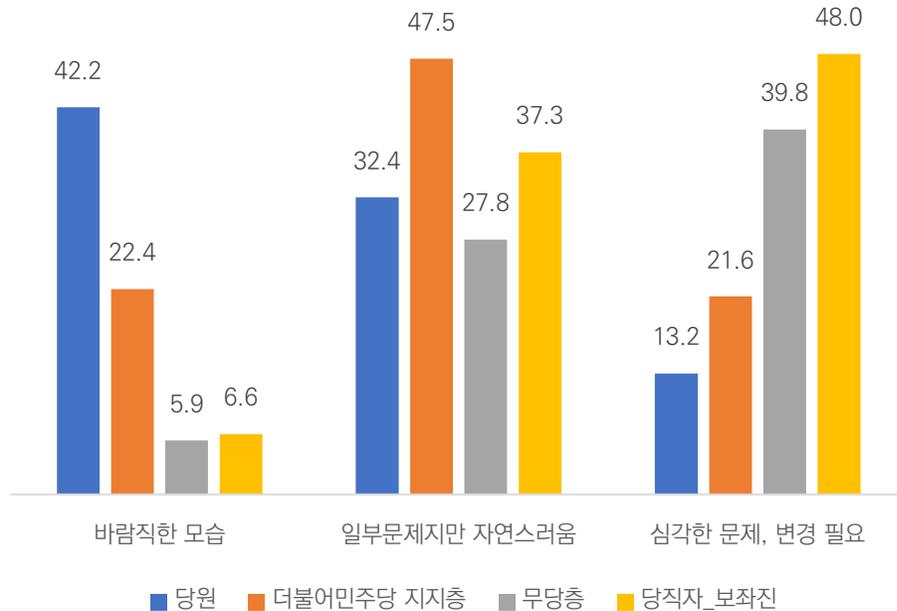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인식이 나빠진 이유는?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부견제 미흡>비리의혹 ≍ 분열
- 당원: 정부견제 미흡>비리의혹 ≍ 분열
- 무당층: 비리의혹> 정부견제 미흡 ≍ 분열
- 당직자_보좌진: 비리의혹>미래비전부족>정부견제 미흡

☞ 무당층 유권자에게 '비리의혹'은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당 차원의 사전대응/사후대응에 변화 필요!



5. 더불어민주당 당원 온라인 문화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온라인 문화에 대해,

당원의 74.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9.9%는 바람직하거나 '일부 문제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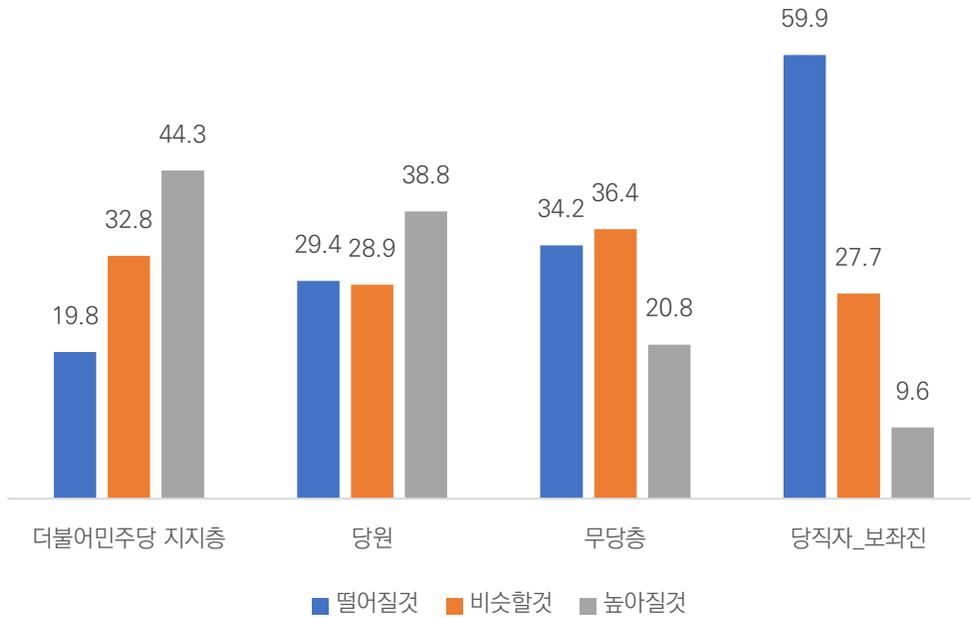
무당층에서는 39.8%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27.8%는 '일부 문제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인식

당직자_보좌진은 48.0%가 심각하게 인식, 37.3%는 '일부 문제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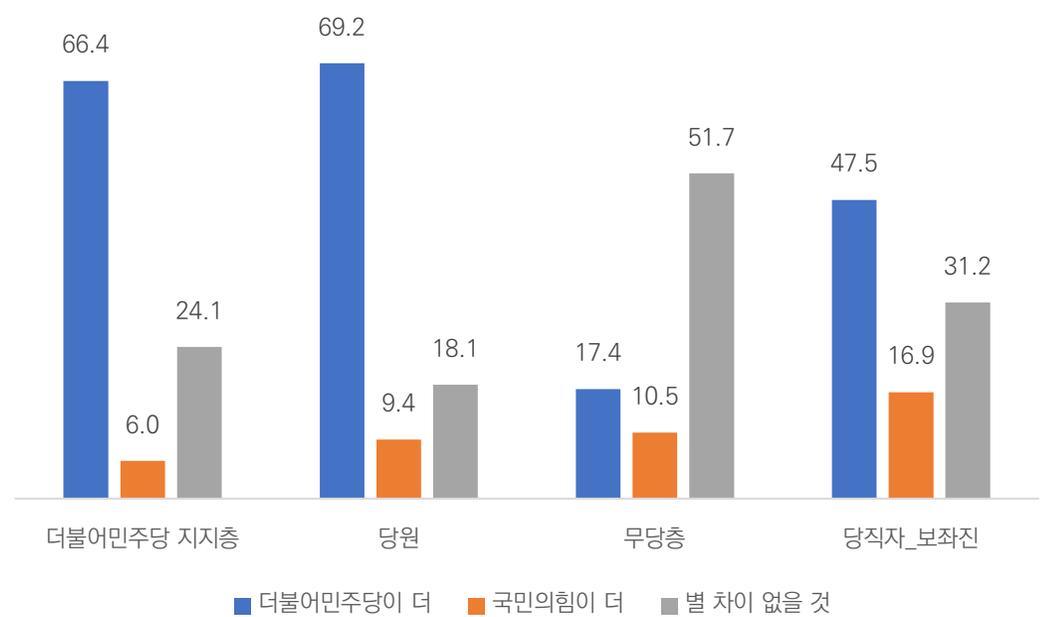
☞ 무당층의 시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문화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 대안 마련 필요!

6. 총선 전망은?

2024년 총선 투표율 전망



2024년 총선 의석 전망



- 더불어민주당 창당에 대해 무당층의 35.2%는 잘못했다, 23.8%는 불가피했다, 34.5%는 판단유보 입장.
-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무당층은 33.0%가 잘못했다, 27.1%가 불가피했다, 33.0%는 판단유보 입장.
- 당원, 지지층에서는 둘 다 '잘 했다'는 입장이 무당층에서보다 2-3배 높아, 무당층과 인식의 괴리를 보여.

6. ...

국회의원/당원/당직자_보좌관 조사에서는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의원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함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의견청취 결과 정리

요약

모두가 불편한 오래된 집: 더불어민주당의 구조

☞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필요!

팀십을 저해하는 상처와 상황: 2022 대선 패배, 현 정부의 야당 탄압

☞ 함께 만드는 승리의 경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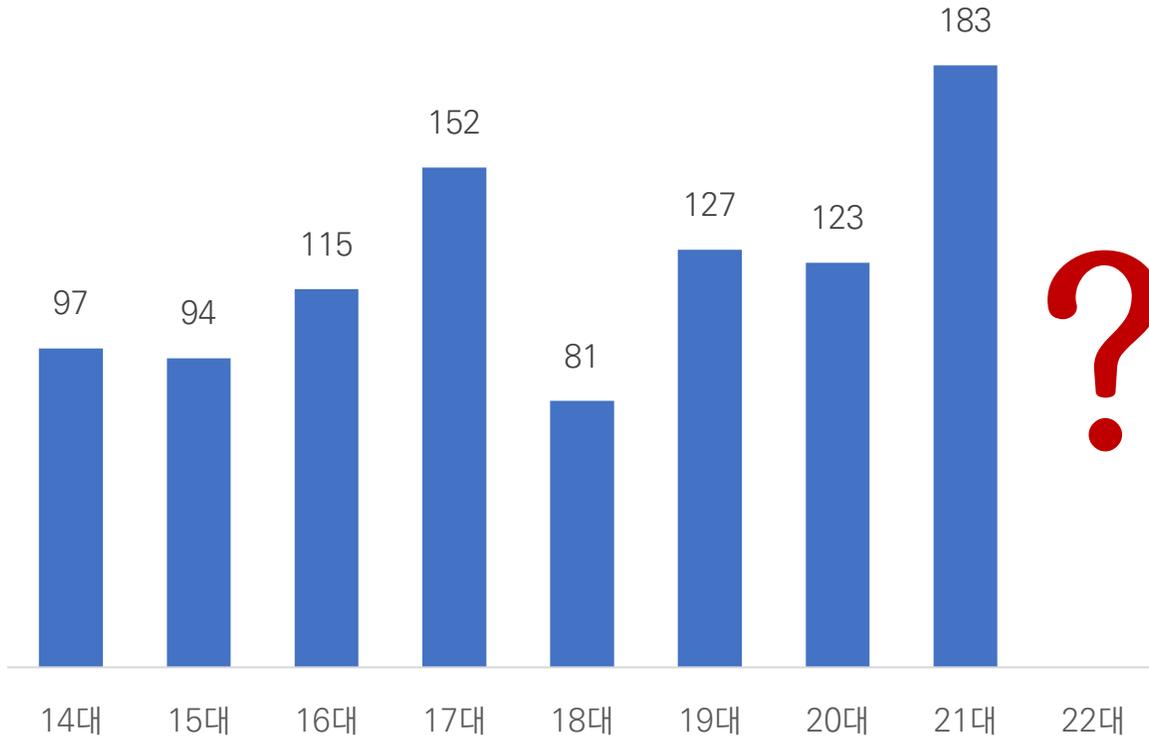
소통의 동맥경화가 빛는 갈등: 모두가 불만, 그러나 끼리끼리 소통

☞ 일상의 소통시스템, 소통규범이 필요!

1. 의원단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역대 선거 국회의원수(당선인수 기준)



14대(1992-1996): 민주당

15대(1996-2000): 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

16대(2000-2004): 새정치국민회의

17대(2004-2008): 열린우리당

18대(2008-2012): 통합민주당

19대(2012-2016): 민주통합당

20대(2016-2020):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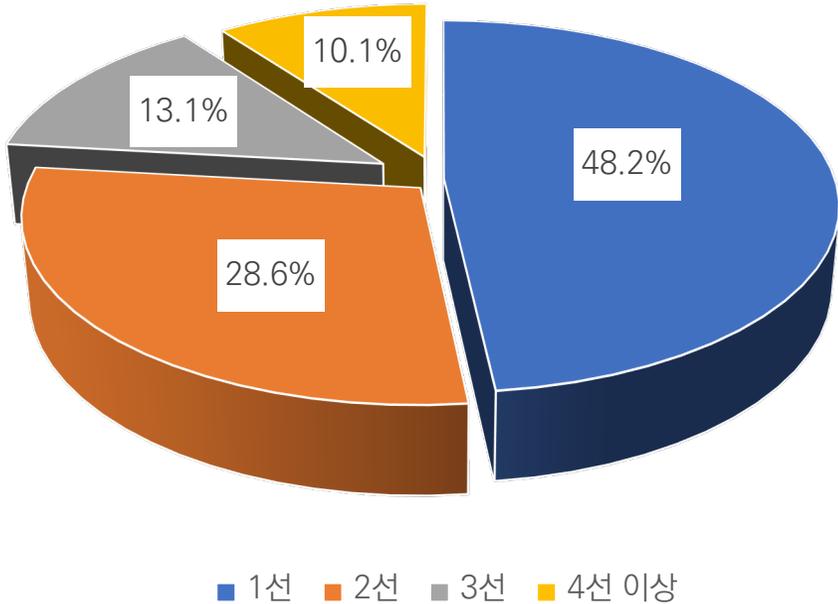
21대(2020-2024):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1. 의원단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7%는 초·재선(초선 48.2%, 재선 28.6%)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수 구성(2023.07.31 기준)



“원내 전략이나 입법 대응에서 위원회나 지역 등의 팀십을 만들거나 적응할 기회가 없었다. 모두 각자 일을 하는 느낌이다.”

“‘코로나19’로 국회의원들끼리 제대로 모일 기회가 없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그런지 당원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래서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구당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다 보니 지역위 당원들과 만나려 해도 어려움이 크다. 장소도 없고 명부 접근권은 시도당에 있고…개인적으로 시도를 해보았는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더라.”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당원들은 그 말을 믿고 공격적인 반응을 해온다. 기회가 되는대로 해명을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곤혹스럽다.”

2. 원외위원장

“지난 5월, 당대표 간담회에서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는 대의원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강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세가 약하고 당원 수가 적은 지역 때문에 대의원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데, 현재 원외위원장들 다수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합의했고 당에 건의했다. 더 이상 이것을 명분삼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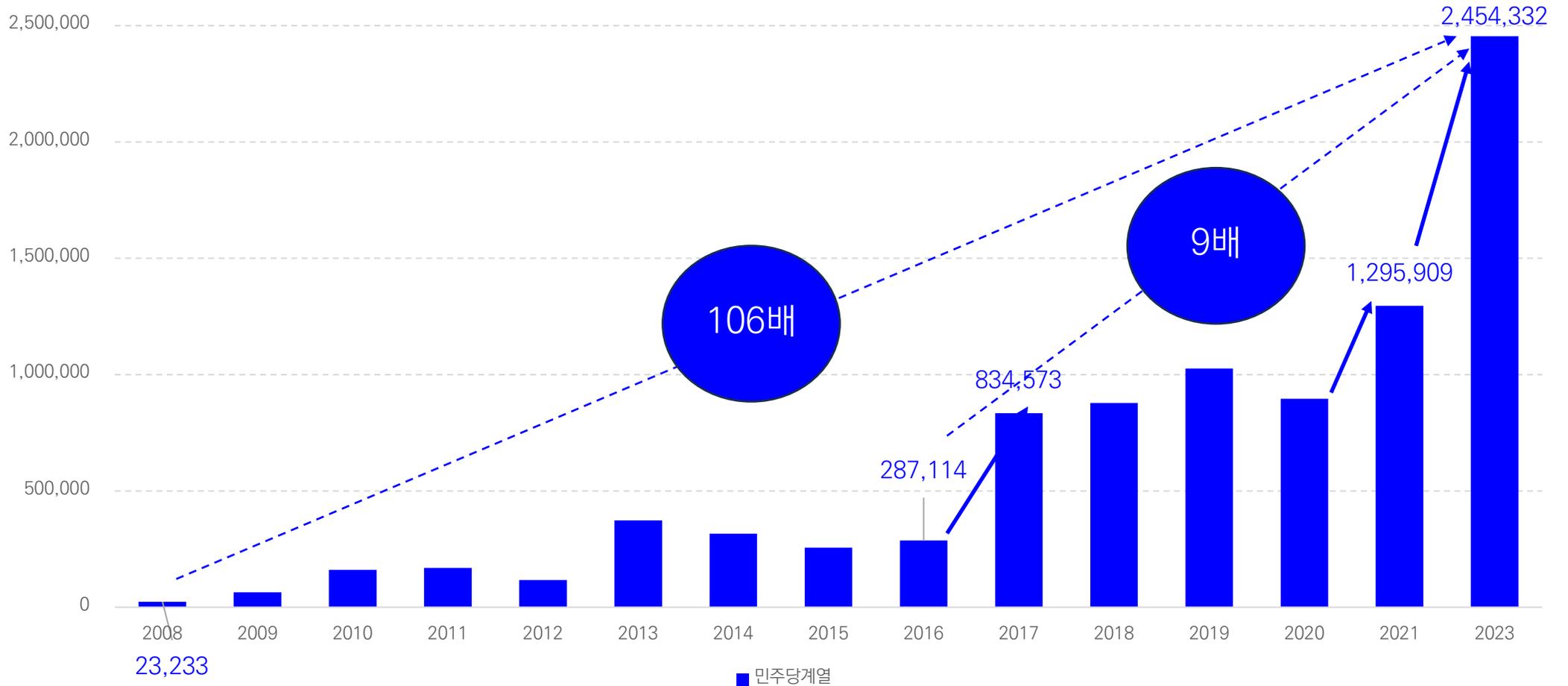
“대의원 권리당원 선출제, 지역위원회 활동 방향 결정을 위한 당원 투표제 도입을 고민하고 실제 실천해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현재 권리당원 명부는 시도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위원회 권한 밖의 문제가 많아 당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사실 원외지역위원장들도 현역의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라든지, 지역위원회 대의원을 추천할 권한 등… 하지만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당원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정당법 상 지구당이 허용되지 않아, 당원들과 만날 사무실도 없고 독자적인 재정 집행권도 없어 어려움이 많다.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여당이 반대해서 입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입법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당원/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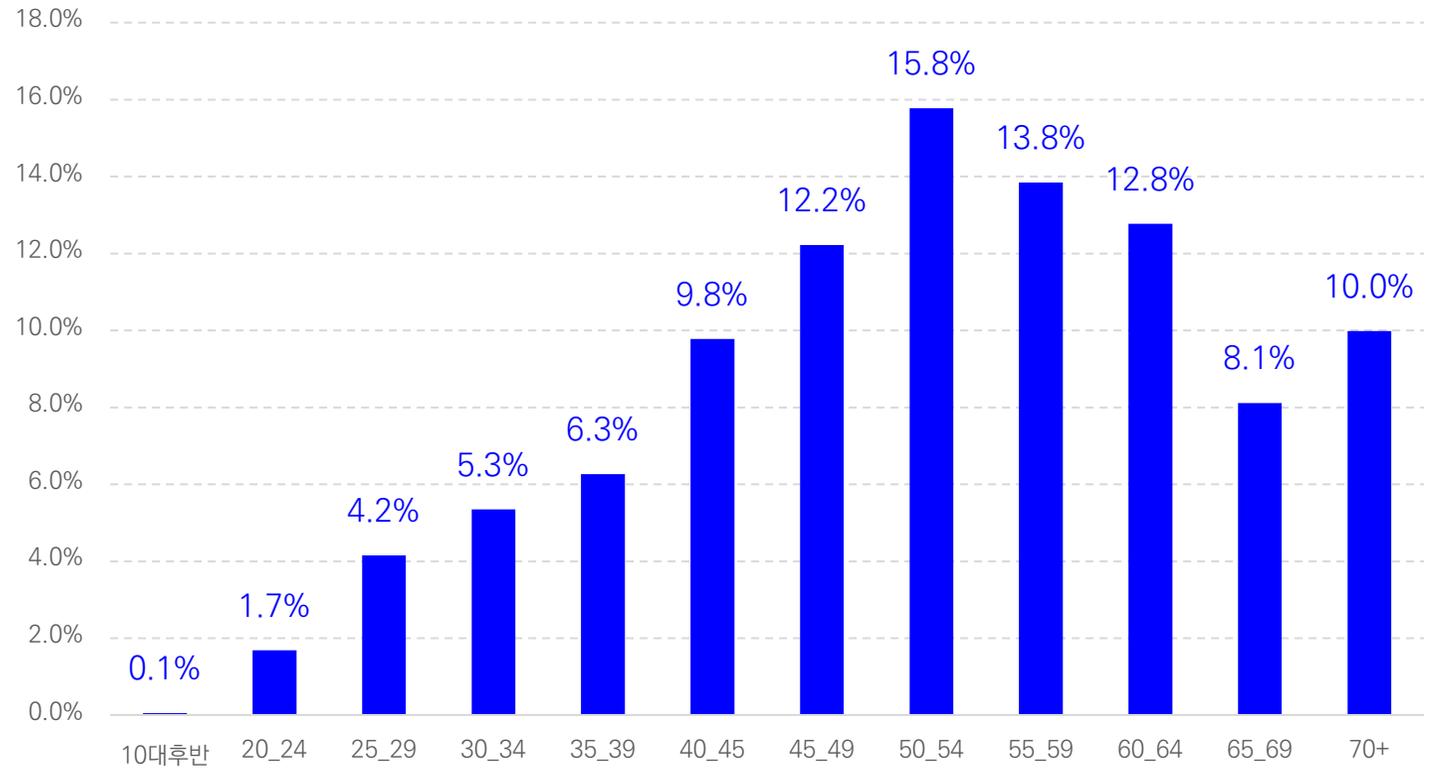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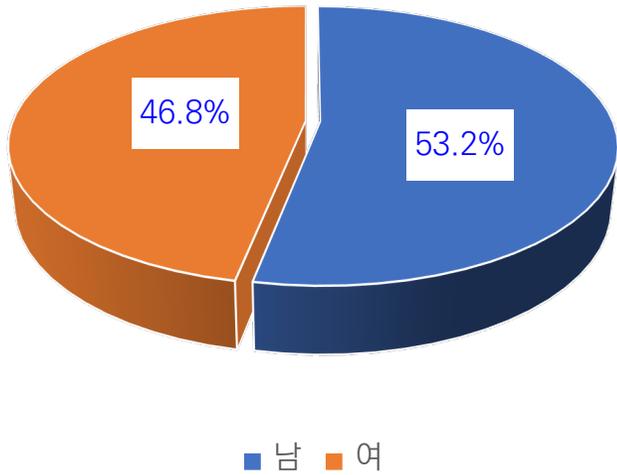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내는 당원 수(2008~2021, 1회 이상; 2023년은 6월 30일 기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a

3. 당원/국민

2023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구성: 성별, 연령구간별



3. 당원/국민

2023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구성: 지역별

	권리당원		선거인(22.06.01)	
	당원수	비중	선거인수	비중
서울	444,775	18.1%	8,378,339	18.9%
부산	54,950	2.2%	2,916,832	6.6%
대구	21,011	0.9%	2,044,579	4.6%
인천	88,387	3.6%	2,534,338	5.7%
광주	185,858	7.6%	1,206,886	2.7%
대전	67,016	2.7%	1,233,557	2.8%
울산	36,175	1.5%	941,189	2.1%
세종	12,459	0.5%	292,259	0.7%
경기	500,892	20.4%	11,497,206	26.0%
강원	61,088	2.5%	1,336,080	3.0%
충북	67,330	2.7%	1,368,779	3.1%
충남	121,512	5.0%	1,803,096	4.1%
전북	326,518	13.3%	1,532,133	3.5%
전남	304,151	12.4%	1,580,098	3.6%
경북	22,126	0.9%	2,268,707	5.1%
경남	77,845	3.2%	2,804,287	6.3%
제주	60,667	2.5%	565,084	1.3%
국제국	1,570	0.1%		

3. 당원/국민

당원/국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정당이 되어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강원도민과의 간담회(춘천) 2023.08.02

“지금 당의 당원/국민 소통 플랫폼 점수는 0점이다. 보다 트렌디하고 피드백이 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당원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일반국민까지 포함한 소통공간이 필요하다”

“민주적 가치, 전환사회에 대한 고민 등 시대적 의제를 고민하는 당원이나 시민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키워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비하고 전담 부서나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과 소통하려면 모바일 폼에 적합해야 하고, 청년들 사이의 상호 소통, 청년들과 당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청년들이 물으면 바로바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3. 당원/국민

신입당원을 환대하고 교육하는 정당이 되어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부산시민과의 간담회. 2023.07.24

“입당한 지 1년 되었다. 당원이 되고 나서 뱃지 하나 받은 게 없고 누구 하나 아는 척 하지도 않더라...”

“일부 의원들이, 당원들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고 하더라. 신입당원들한테 당 정체성이 뭔지 교육이나 시켜주고 그런 말 하면 좋겠다.”

“당 주최 집회에 가면 국회의원, 시장, 이런저런 위원장만 모두 말하고 당원들은 들러리로 앉아만 있다가 온다. 한 두 번 가보고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

“홈페이지가 당원 특히 신입당원들에게 너무 불친절하다. 어디 가서 뭘 찾아보라는 건지 모르겠다. 당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3. 당원/국민

당원자치회, 지역위원회 운영 등에서 당원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경남도민과의 간담회(창원) 2023.07.23

“당원자치회 모임을 하면서 우리동네에 현수막을 걸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광역시도당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재정지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역위원회나 시도당은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당비로 운영되지 않나? 그러면 1년에 한 번 당원들한테 재정보고도 하고 활동보고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당은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행사에 가면 우리 지역위원회나 시도당 대의원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그 분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당원총회 이런 걸 개최해서 대의원 선거도 하고 같이 할 일도 논의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당론을 왜 의원들만 모여 결정하나? 모든 걸 물을 수는 없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당원투표로 당론을 물어야 한다.”

3. 당원

아직도 웬 ARS투표? 모바일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해야...

“온라인 환경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나라에서, 웬 ARS투표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당원들이 ARS 전화를 기다리다가 받아 줘야 하나?”

“기업들은 온라인 주주총회도 한다. 우리 당도 모바일 전당원 투표를 했지 않은가. 지역단위 권리당원 총회, 당내경선 투표 이런 걸 모바일로 하면 된다. 왜 하지 않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면 당의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 모든 정책을 몽땅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정책은 당원투표로 결정하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인천시민과의 간담회 2023.08.01

*사진출처: 뉴스12023.08.01

3. 당원/국민

현행 대의원제는 바뀌어야...

“나도 대의원이다. 그런데 지금 같은 대의원제는 폐지해야 한다. 사실 지역위원회 일 대부분은 대의원들이 한다. 현수막 하나를 걸고 집회를 한 번 해도 대의원들만 모여서 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과는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당이 당원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이 알음알음 모아서 대의원을 지명하고 이걸 권력으로 사용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따지고 보면 대의원 표가 과다 대표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된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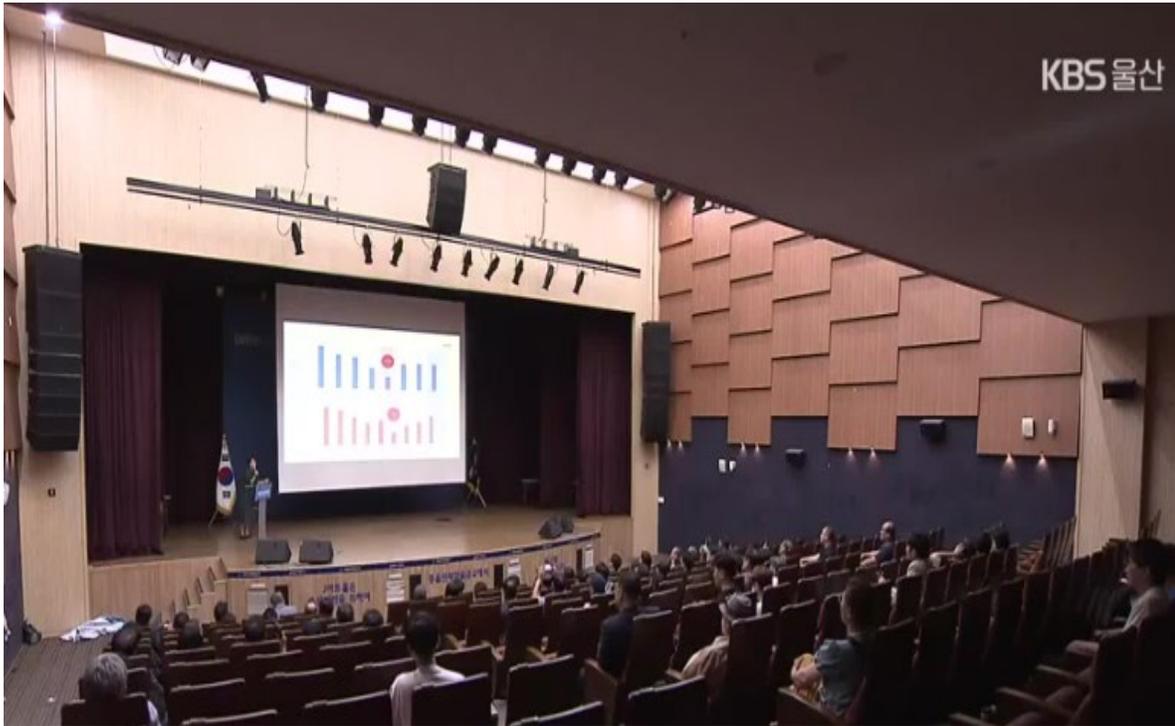
“당대표 선출할 때 전 당원이 1인1표를 행사하면 몇몇 대의원표를 모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200만 이 넘는 당원들한테 표를 얻어 승리하려면 제대로 정치하는 수밖에 없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경남도민과의 간담회(창원), 2023.07.23

3. 당원/국민

현행 전국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바뀌어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울산시민과의 간담회. 2023.07.23

*사진출처: KBS울산방송, 2023.07.23

“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전대위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던데, 나도 대학생이지만 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른다. 전대위가 입장을 발표할 때 대학생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반발이 생기지 않는가? 전국위원회 운영이 당원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당 전국청년위원회 지도부가 자기정치를 하는 것 같다. 정작 청년당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자기들 관심 있는 일에만 입장을 발표하더라. 청년 당원들이 전청위 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으로 우원식 의원이 단식을 했다. 그런데 왜 혼자 단식을 하게 하나? ‘을지로위원회’인가 하는 당 위원회가 있지 않나? 그 위원회에서 같이 결함하고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3. 당원/국민

당직/공직후보 경선, 공정한 경쟁 보장해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경기도민파의 간담회(부천). 2023.07.26

“당내경선 신청자가 1명인 지역 말고는 모두 경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검증도 되고 당원들도 뭘 알아야 지지활동을 할 거 아니냐?”

“ARS전화 받고 걸고, 이게 무슨 경선이냐? 적어도 당원들에게는 후보자 소개도 해주고 정견발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한 다음에 투표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요즘처럼 유튜브가 일상화된 시대에, 유튜브로 후보자들이 자기 소개도 하고, 합동연설회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 알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당원명부를 독점해서 자기들만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건 공정하지 않다. 다른 후보들도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 문자, 설명회, 연설회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

“현역의원 평가를 한다는데 왜 당원들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나? 우리동네 현역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아야 다시 지지할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3. 당원/국민

인재영입? 전략공천?

“총선을 할 때마다 당 밖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데려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하는지 보라. 양향자 의원…인재영입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당 밖의 인재가 필요하다더라도 최소한 당과 정체성이 맞아야 하고 당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천해야 한다.”

“당 밖에서 사람을 데려와 단수공천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당이 필요해서 데려오더라도 경선을 거치면서 검증을 해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검증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당에 부담이 된 사례들이 여럿 있지 않은가.”

“청년정치인이 너무 적어서 당이 청년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말은 맞다. 그런데 경선 등 능력을 검증 받을 기회를 갖지 않고 곧바로 주요 당직이나 국회의원 등 중책을 맡기면 안 된다. 기존 실패의 경험을 잘 평가해야 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인천시민과의 간담회. 2023.08.01

*사진출처: 네이트뉴스(2023.08.01)

3. 당원/국민

당, 정책과 사람으로 미래의제 대응능력을 갖춰야...

“기후나 식량, 에너지, AI 등 기술, 인구감소나 연금문제...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당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음 선거 공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은 기업들도 ESG경영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시대다. 지방정부들도 ESG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기후문제나 인구감소 문제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관심이 없어 보여 걱정이다.”

“당 안팎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관심사가 다르다. 우리는 청년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소수가 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이 크다. 연금은 어떻게 될 지, 집은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상기후가 계속 되는데 기후재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당이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들었습니다.” 경기도민과의 간담회(부천), 2023.07.26

3. 당원/국민

당, 긴 호흡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정치인 키워야...

“현재 민주당은 청년들의 구태정치를 방관하고 있다.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청년들 때문에 지역현장에 발 딛고 노력하는 청년정치인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청년정치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위한 투자를 해달라. 지역 청년들이 현안에 맞게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스터디나 토론 프로그램, 공모형 지원사업에 중앙당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각 지역 청년위원회와 연계하여 중앙당이 지원하는 정치사관 학교 등 긴 호흡의 청년 프로그램을 원한다. 지역단위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결합한 실천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강원도민과의 간담회(춘천). 2023.08.02

사진출처: 뉴스1(2023.08.02)

3. 당원/국민

대선 패배의 상처는 깊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기자회견도 했던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탈당을 해서 상대당 후보를 조용히 지지하면 되지, 언론에 대고 온 동네 떠들었다. 그것이 간발의 격차로 패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안 했다. 현수막도 거는 등 마는 등 했고 선거유세도 다른 동네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원망스럽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잘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을 내주었다. 부동산정책 실패, 검찰개혁 실패는 국민 지지를 잃은 핵심 원인이었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출마한다면 국민들은 책임감도 없는 정당이라고 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 패배했고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끼리 지나간 일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분열된 모습을 계속 보이면 다음 총선도 위험하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 서로 불만이 있어도 일단 단합해야 한다.”

3. 당원/국민

현 정부 야당 탄압에 대한 우려가 컸다...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대하여) 현 정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들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다. 야당으로 더 선명하게 현 정부의 무능과 퇴행, 위법행위에 대해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의원들이 다칠 거 아니냐?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힘내서 싸울 수 있나?”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지만, 법원은 믿을 수 있나?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자동 발부해주는 곳 아닌가?”

“국민들이 ‘방탄국회’ 프레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싸워서 야당으로서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검찰에 대해 더 선명하게 싸워야 한다. 위법한 수사와 기각될 영장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하는데 왜 의원들은 검사 탄핵을 하지 않고 있나?”

3. 당원/국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은 팀십(teamship) 부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오송 참사’, ‘대통령일가 양평 땅 의혹’ 등 야당으로 제대로 따지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계속 쌓여가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갑갑하다. 잘 준비해서 돋보이는 의원들도 있지만, 팀플레이가 안보이고 다 개인플레이 하는 느낌이다.”

“21대 국회 180석으로 출발했다.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라고 했는데 여태 제대로 된 결과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제발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에 성과를 보여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것 아닌가?”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랑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것 같다.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해서 기대를 하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전혀 추진을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무시해서 그런 건가?”

“당대표의 리더십이 잘 안보인다. 원래 리더는 사령관처럼 각 부대마다 할 일을 할당하고 전체적으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그래야 한다. 그런데 대표는 혼자 당원도 만나고 국민도 만나기는 하는데 당 조직이나 의원단을 움직여서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다.”

4. 첫투표자/2030 간담회

“정당에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독일 정당과의 간담회 같은...”

“이렇게 가끔 이벤트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당과 정기적인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이 있는 대학 총학생회나 대학생 간담회 같은...”

“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대학생 당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당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상대 정당에 의제를 빼앗기고 있다는 점, 결집력이 약하다는 점, 현재 활동하는 청년정치인 가운데 셀럽이 없다는 점...”



“혁신위 생애 첫투표자 간담회” 2023.07.14

사진출처: 채널A(2023.07.14)

4. 첫투표자/2030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2030 청년좌담회” 2023.07.30

사진출처: 뉴스1(2023.07.30)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다 신호등 치킨 같다. 순간 인기만 얻으려고 내놓는데 맞은 다 똑같은… 선거 때마다 뭔가를 내놓기는 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

“출산율이나 연금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청년정책도 청년만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청년-장년 등 국민들의 생애 전주기에 대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청년들도 미래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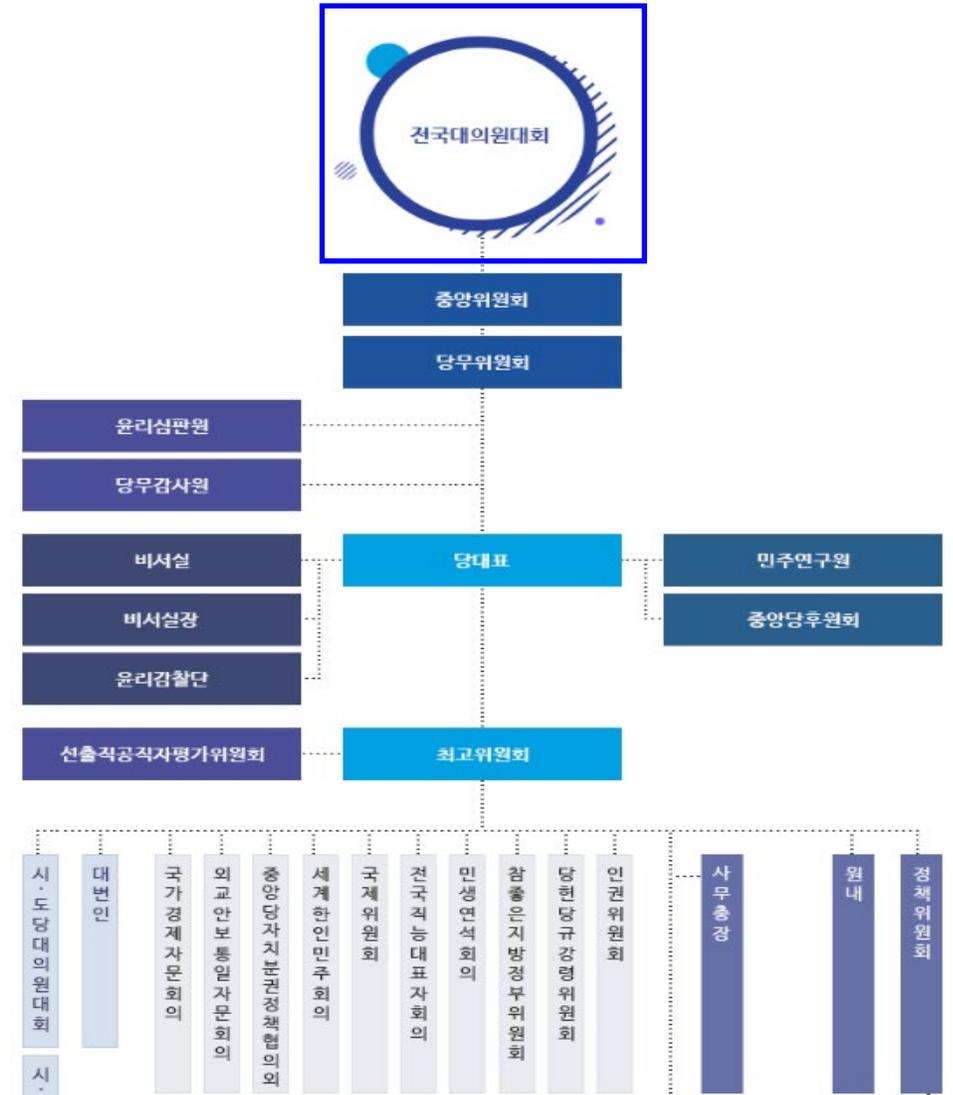
“민주당이 너무 늙은 느낌이다. 저출생, 연금, 기후위기, 교육, 주거문제까지 청년들에게 절실한 문제가 많은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옛날 이야기만..”

“우리 눈에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청년정치인을 전략 공천하거나 단수 공천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택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선거 때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반짝 만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

IV 더불어민주당 조직진단

2년에 한번 전당대회는 하는데, 당헌에 '전당대회'가 없다...





- 당원/대의원이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 대의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인 더불어민주당?
- 평상시 당의 최고의사결정은 중앙위원회-당무위원회-최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당헌 상 중앙위는 대의기관이고 당무위-최고위는 집행기관이다?
- 당헌 상 대의기관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전국대의원대회인데...

당헌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당대표
- 2. 최고위원
- 3. 상임고문과 고문 100명
- 4. 당무위원
- 5. 중앙위원 800명
- 6. 당 소속 국회의원
-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 9. 시·도당위원장
- 10. 지역위원장 253명
-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명

지역위원회 선출 대의원 규모를 그때그때 당무위에서 정한다?

- 15. 당무위원회가 선입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700명
-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민민주회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개정 2021.5.2>
- 22. 전국직능대표자회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25. <삭제 2020.7.16>
-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명

지역위원회가 지역대의원을 선출하는데...

당헌

제4절 지역위원회

- 제71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 ④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지역대의원대회) ①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3조(지역상무위원회) ①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당무 처리기관이다.
- ②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4조(지역위원장) ①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 및 당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역위원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22.8.26.>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 지역위원회는 지역 소속 당원 협의체
- 지역대의원은 지역위원회(소속 당원들)가 선출해야 하는데...

지역위원회가 지역대의원을 선출하는데...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1절 지역대의원대회

제48조(지위와 구성) ①지역대의원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이 경우 지역대의원 총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4. 해당 지역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개정 2020.7.9.>
9. 권리당원이 선출한 지역대의원

③제2항제9호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포함하여야 하며, 권리당원총회나 권리당원 다수추천에 의해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권리당원총회를 통해 선출할 경우 가장 많은 유효득표를 받은 권리당원 순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권리당원총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투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지역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가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④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 ⑤권리당원총회 소집과 절차 등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⑥제2항제7호의 위원장은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8.19.>

- <대의원선출 규정>, <권리당원 총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총회’는 당헌 상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수임기관인데...

당헌

제2절 중앙위원회

120?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회의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수임기관, 즉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회의체
- 그런데 중앙위원회 구성에서 선출직 대의원은 어디에 있을까?

전국위원회가 중앙위원을 추천한다?

당헌

제3절 전국위원회

제32조(전국위원회) ①성, 세대, 계층 등 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옹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10. 소상공인위원회 <신설 2022.8.26>

②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전국위원회가 중앙위원을 추천하는데...
- 전국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누가 선출하나?
- 전국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중앙의원으로 추천하나?

당규4호_당직선출규정

제12조(선거인단 구성)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일반당원

②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한다.

③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여성 대의원과 여성 권리당원으로 한다.
2. 전국노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노인 대의원과 노인 권리당원으로 한다.
3.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청년 대의원과 청년 권리당원으로 한다.
4. 전국대학생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대학생 대의원과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재학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로 한다.
5.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장애인 대의원과 장애인 권리당원, 장애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발달·정신장애인 부모 중 1명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으로 한다. <개정 2022.8.19>
6. 전국노동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노동부문 대의원(추천 대의원을 포함한다), 노동부문 권리당원, 시·도당 노동위원장으로 한다.
7. 전국농어민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농어민대의원과 농어민권리당원으로 한다.
8. 옹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대의원

선거와 선거 사이, 사실상 당 최고결정기관은 당무위원회인데... 당원과는 무슨 상관?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6. 중앙위원회 의장
7. 전국위원회 위원장
8. 사무총장
9.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중앙당후원회의 장 <개정 2020.8.28.>
1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1. 당헌 제33조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의 경우 수석부의장) <개정 2020.8.28.>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시·도지사
14.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5.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기구의 대표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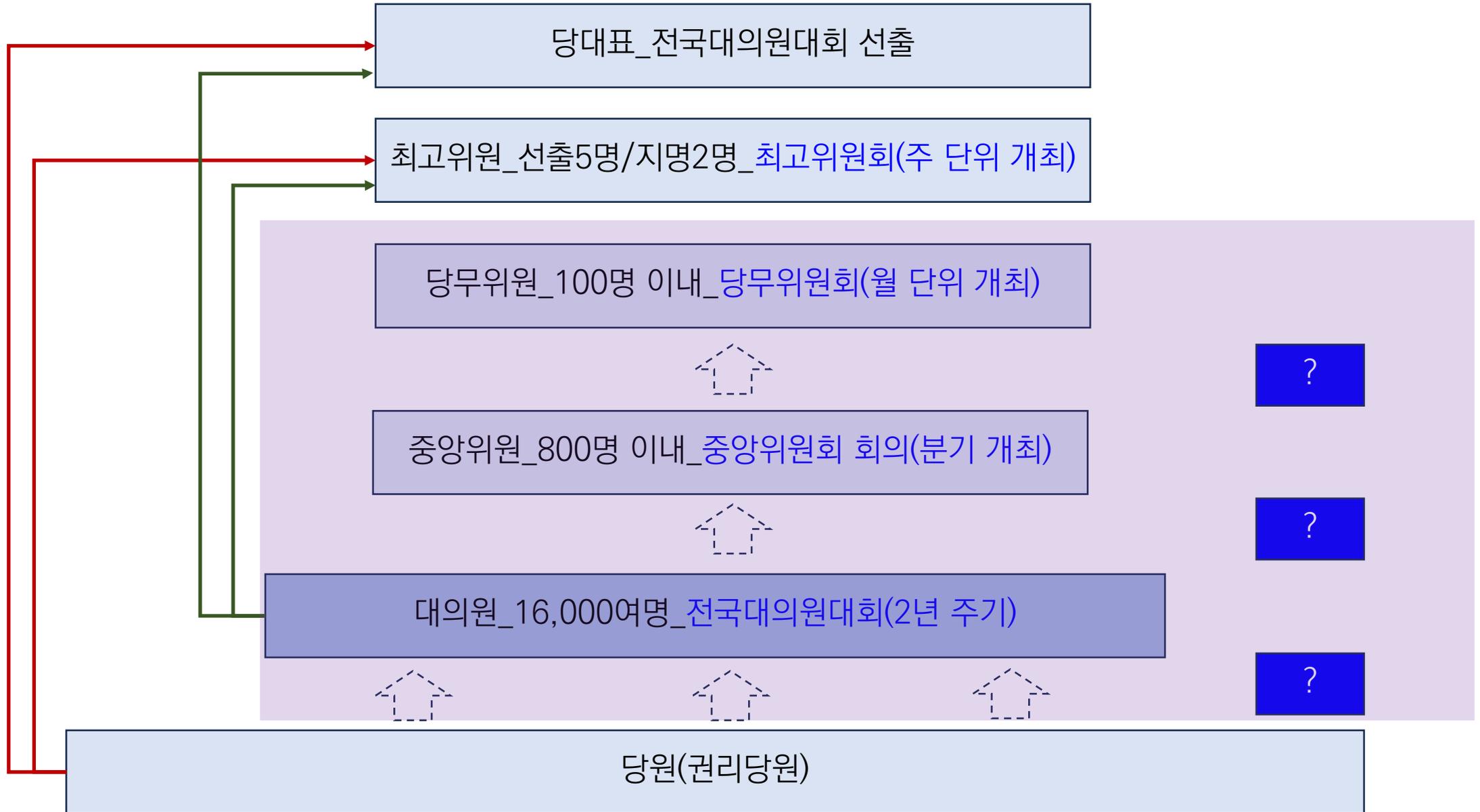
1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위원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개정안의 심의와 발의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7.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2.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3.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4.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15.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6. 당무활동 보고 요구
17.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8.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조직은 ‘당원 기반 정당’이 아니라 ‘간부 정당’이다.

강령

시민중심 민주주의 실현

시민들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당과 의회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시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당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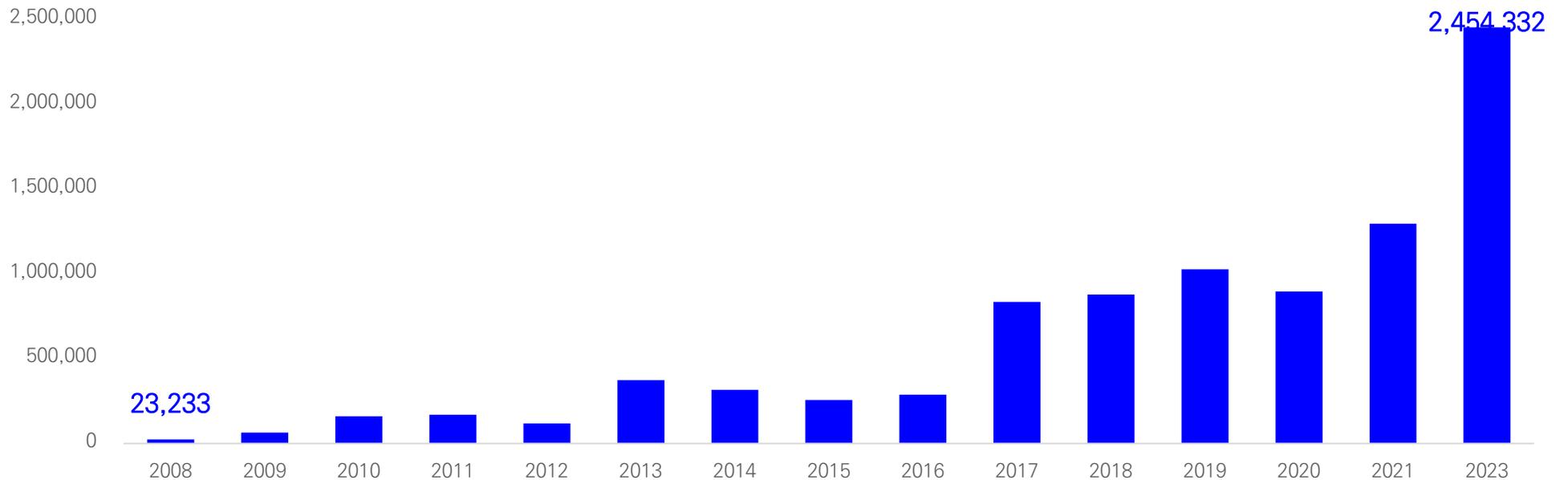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더 많은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AI)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 더불어민주당 당조직의 문제는 ‘대의원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 국회의원과 중앙당 당직자가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간부정당이다.
- 당의 일상적 의사결정권은 중앙위-당무위-최고위에서 행사되는데, ‘(당원-대의원)-중앙위원-당무위원’의 연결구조가 없고, 중앙위-당무위가 전현직 선출공직자와 당직자로 채워져 있다.
- 당원들은 ‘당원의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의원도 권한이 없다.’ 2년에 한 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 30%의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1990년대 이후 계속 리모델링을 해왔지만... 지금은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

-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과 수도권에 당원이 밀집해 있던 간부정당이었다.
- 지난 30여년, 민주당 계열 정당은 부침이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국정당화’의 꿈을 실현해 왔다.
- 당원 기반도 전국단위로 확장되었고, 권리당원 수는 100배 이상 늘어났다.
- 그런데 정당조직의 골격은 1990년대 간부정당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지속적인 리모델링으로 조금씩 넓어져 오긴 했지만, 2016년 이후 당원이 급증했고 지금은 골격부터 재건축이 필요!



∨ 더불어민주당 혁신방향

기본방향

나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원)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조직)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더불어민주당

(공천)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유능해지는 더불어민주당

(소통)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더불어민주당

(정책)정책으로 승부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 미래를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나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지금은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나’의 권리가 존중되고 목소리가 어우러져야 하는 시대.
-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시민과 당원을 주체로 초대하고 함께 할 자리를 보장하는 정당이어야 함.
-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나’들이 ‘내 당’이라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함.
- 더불어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변화를 거듭하는 ‘나’들에 의해 끊임없이 갱신되고 발전되는 정당이어야 함.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 지금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대.
-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만들어진 구조와 규범 안에 당원과 시민이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어야 함.
- 당에 관심이 있고 아끼는 당원,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권한을 보장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갖춰야 함.
- 함께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 정례 행사를 기획하며, 투표 시스템 등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고 당원과 시민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함.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당원, 국민들을 위한 ‘집’이 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세대, 거주지역, 직업, 취미, 관심사를 공유하는 당원/국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씩 있고,
- 필요에 따라 함께 모여 토론과 숙의를 할 수 있는 넓은 공유공간이 함께 있는 집의 모습을 상상함.
-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없음.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돈도 모으고 규칙도 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함께 만들어야 함.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이며 출발점임.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유능해지는 더불어민주당

- 공직윤리를 갖춘 유능한 후보자를 공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당의 책무.
- 좋은 공직후보자는 정당의 교육훈련, 정당을 통한 활동 경험, 제도화된 공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 정당의 당원이라면 연령, 거주지 등에 제한없이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정당의 당원이라면 투명한 검증 시스템에서 당내경선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을 대신해 1차적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함.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국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공동의 필요가 있을 때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열린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전국에 있는 당원, 대의원, 당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1:1 소통을 할 수 있고 1:多, 多:多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해야 함.
- 열린 소통채널은 당헌당규로 보장되는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서로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규범도 마련되어야 하고 실천을 통한 시행착오도 거쳐야 함.
- ‘빨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함께 하나씩 만들어가되,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함.

VI

더불어민주당 혁신 세부내용 제안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국민
현행	30%	40%	5%	25%
제안		70%		30%

-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결과 50%, 선거인단투표 결과 50%로 진행
- 당대표-최고위원 본 경선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결과 70%,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로 결정
- 투표는 PC/모바일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유선전화 사용을 원하는 당원을 위해 ARS시스템은 보완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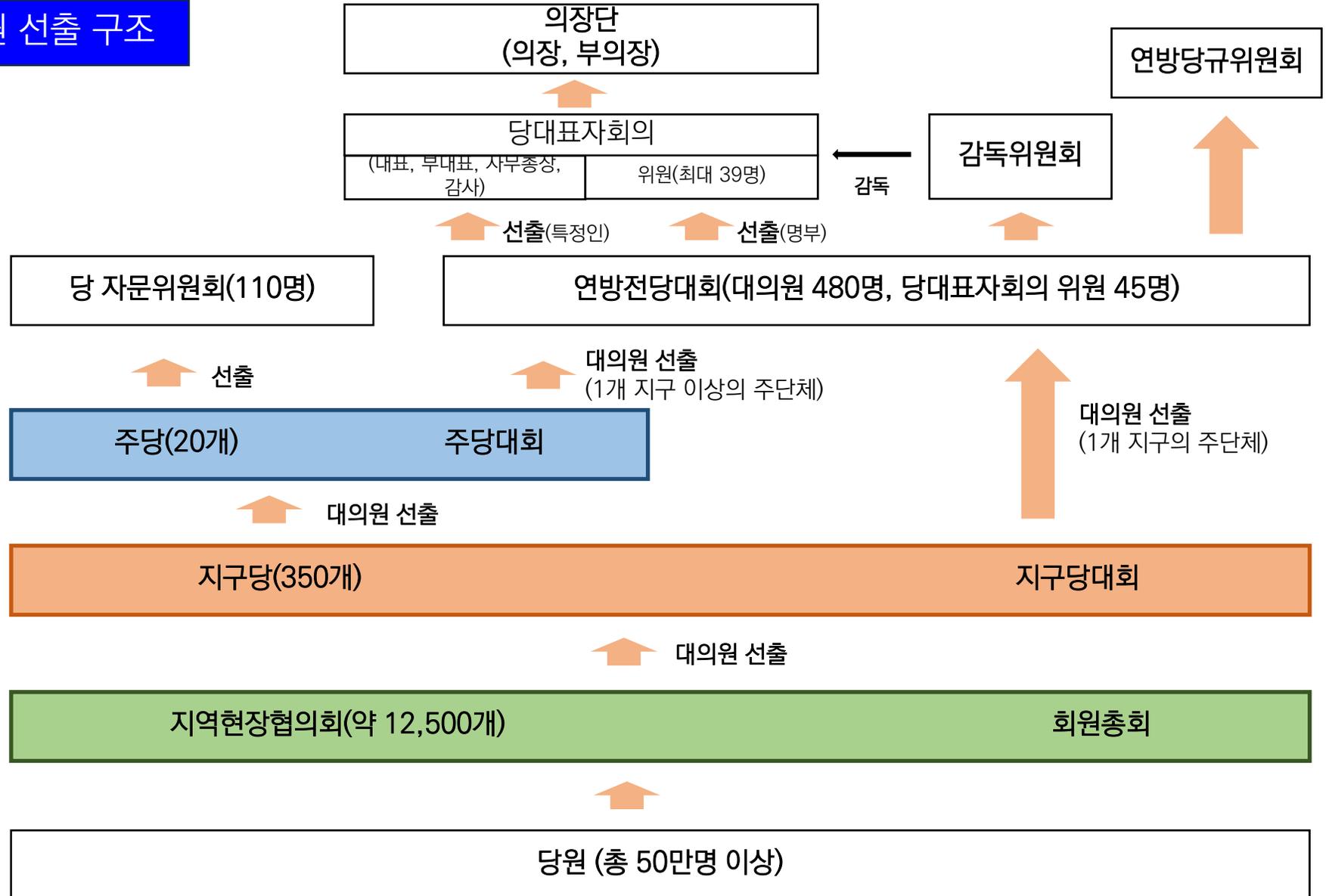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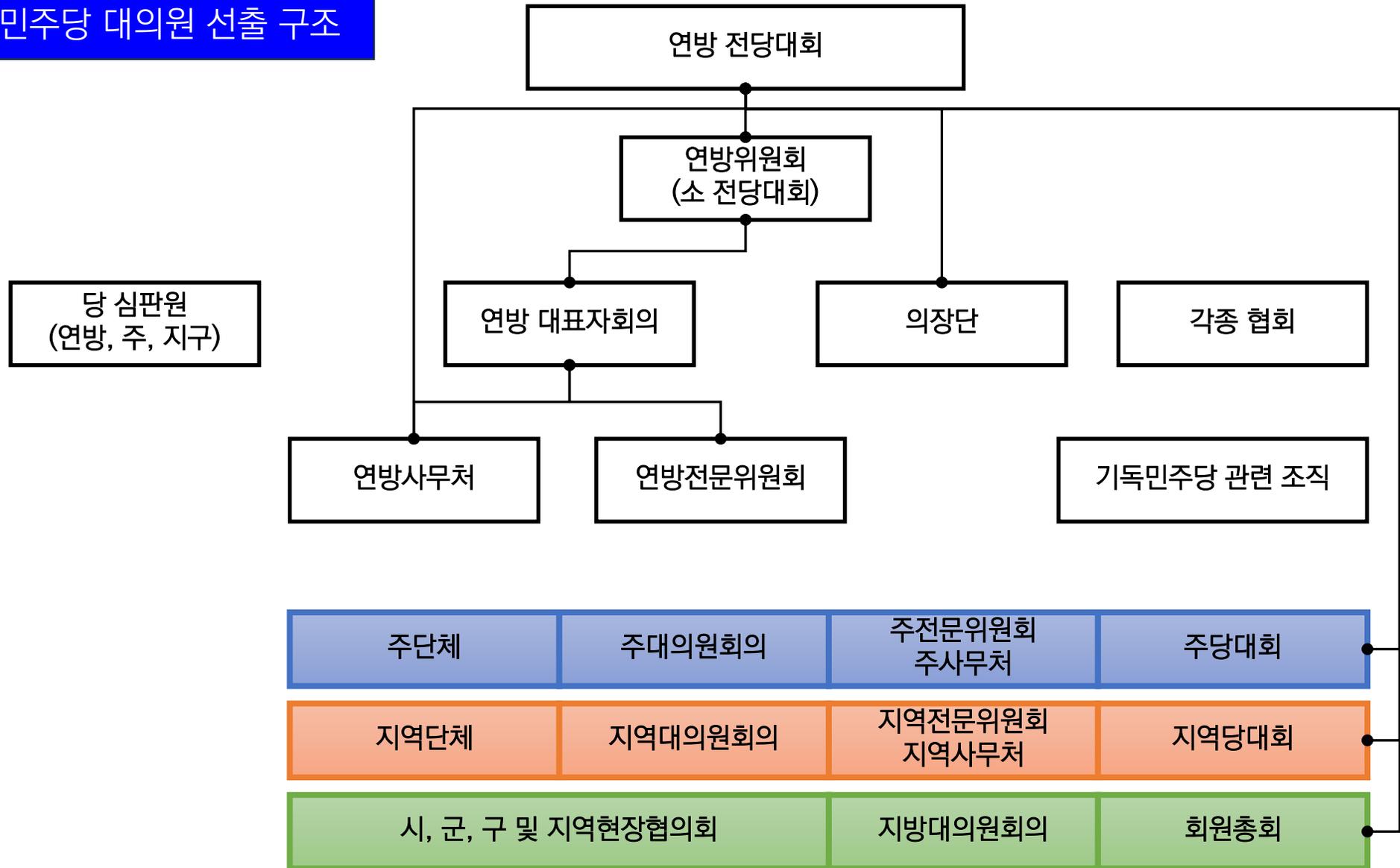
제안

- 대의원 선출, 권한과 의무를 담은 <대의원제도 운영 규정> 제정
-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2년 임기 전국대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
- 전국대의원의 70%는 권리당원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
- 전국대의원은 1) 현재 당연직 대의원 수를 유지하고 총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방안과 2) 당
연직 대의원 수를 조정하여 현행 대의원 총수를 유지하는 방안 중 선택
-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선출 대의원 승인
- 지역위원회 대의원 선거는 중앙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
- 2년 임기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당의 주요정책 관련 온라인 투표에 참여

참고: 독일 사회민주당 대의원 선출 구조



참고: 독일 기독교민주당 대의원 선출 구조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제안

- 〈더불어민주당 정기 정책주간(가칭)〉 운영
-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정책토론이 정례화되어야 함.
- 매년 1~3월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주간’으로 정하고,
- 홈페이지에 ‘정책주간’ 코너 개설,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등의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함.
- 당 정책단위(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가 사전에 정책주간 운영 의제를 제안하고,
- 홈페이지에 의제와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면,
- 지역위원회/전국위원회 월례 권리당원 모임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책토론을 진행함.
- 각 단위별 권리당원 모임 토론 결과 마련된 제안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공유
- 핵심방향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당무위원회-최고위 의결을 거쳐 공식화
- 2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전당대회에서는 해당기간 당 정책노선을 투표로 결정하고, 이를 다음 전당대회 이전에 시행되는 전국단위 선거 공약에 반영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참고: 영국 노동당 정책포럼

Labour policy forum

Have your say in the development of Labour policy

About National Policy Forum Get involved News Resource Hub

Keywords Search

Everywhere Policy documents Submissions Other pages

Welcome to Labour Policy Forum

NATIONAL POLICY FORUM CONSULTATION 2023

Welcome to Labour's online home of policy development. The National Policy Forum (NPF) consultation for 2023 has now closed and we wanted to thank you for all your views on how the next Labour government can build a fairer, greener and more dynamic Britain for all. Click on the logo above to read the six consultation documents

NPF Consultation launch

나중에 시... 공유

Join the conversation

Labour Party policy is made democratically,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with members, the public, businesses, experts and civil society groups. You can use this website to take part too. Join discussions with politicians and representatives from across the Labour Party, share your ideas with us, and help us build a more equal and prosperous Britain.

You can see some of the topics we're currently discussing below.

[Find out more](#)

Policy Commissions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참고: 영국 노동당
정책포럼

NPF policy commission work plans

Each of the six National Policy Forum (NPF) **policy commissions** will meet throughout January - March 2023 to discuss a variety of topics as part of an agreed work plan.

The topics are set out below.

● A green and digital future

- Delivering growth
- Leveraging science and growth
- Improving transport

● Better jobs and better work

- Workers in the everyday economy
- Business in the everyday economy
- An industrial strategy for the everyday economy

● Safe and secure communities

- Neighbourhood crime +/- Neighbourhood policing
- Reduce reoffending
- Youth justice

● Public services that work from the start

- Preventative public health
- Primary care, community care, dentistry, and women's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 Children's social care and education

● A future where families come first

- Childcare and child poverty
- Social security and employment support
- Housing

● Britain in the world

- Fair and ethical trade policy
- Green trade policy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참고: 영국 노동당 정책포럼

Recent documents

Posted on 27-05-22 by Policy Development in [Britain in the world](#)
[Protecting our national interests and promoting Labour values abroad](#)

Posted on 27-05-22 by Policy Development in [A future where families come first](#)
[Delivering financial social and housing security](#)

Posted on 27-05-22 by Policy Development in [Public services that work from the start](#)
[Securing first class public services for all](#)

Posted on 27-05-22 by Policy Development in [Safe and secure communities](#)
[Guaranteeing safe and secure communities through an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Posted on 27-05-22 by Policy Development in [Better jobs and better work](#)
[Guaranteeing good work in the modern workplace](#)

[View 5 more](#)

Recent submissions

Posted on 31-07-23 by Lee Hewson in [A green and digital future](#)
[Underfloor Heating in all new builds](#)
 Advantages and Benefits of Underfloor Heating Systems1)
 Running costs at 60% of conventional central...
 0 comments | 0 votes

Posted on 31-07-23 by Lee Hewson in [A green and digital future](#)
[Lee Hewson](#)
 Make all new builds have underfloor heating: it operates at 40 degrees C, whilst conventional wall m...
 0 comments | 0 votes

Posted on 29-07-23 by Labour Party Member in [A future where families come first](#)
[Council Tax Removal](#)
 A proposal is to go back to the land rate value of a house or business. Remove the home council tax ...
 0 comments | 0 votes

Posted on 26-07-23 by Welwyn Hatfield in [Public services that work from the start](#)
[A proposal for a reformed electoral process and House of Lords](#)
 Labour's National Policy Forum has formally recognised that our electoral system is a driver of "the...
 0 comments | 1 votes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

현행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23조(당원조직강화) ①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당원조직 강화를 위해 당원 관리, 당원 활동 강화, 당원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안

- 프로그램 예시) 성평등, 장애 인식 개선, 온라인 소통 윤리, 핵심정책의제 등 방법)
 - 당원 공개모집으로 <당원 교육 TF> 구성
 - 당원이 직접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 내용 목록을 구성
 - 당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
 - 최종안 결정 후 교육연수원 업무로 할당
 - 홈페이지 별도 꼭지로 수록, 매년 정기교육 프로그램 갱신

1.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5) 당원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약속>

제안

- 당의 온라인 소통문화를 당원 간 합의를 통해 규범으로 만들고, 신입당원 교육자료로 활용
- 내용 예시>
- 평등한 소통: 연령, 성별, 이념 등에 관계없는 평등한 대화
- 존중하는 소통: 혐오, 비하, 차별이 없는 대화
- 민주적 소통: 소수의견에 대한 인정, 다수의견에 대한 존중
- 방법>
- 당원 공개 모집으로 <온라인 소통 약속 TF> 구성
- 온라인 소통 규범 마련
- 당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
- 별도의 <온라인 소통 규범> 제정 혹은 현행 <윤리규범> 개정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1) D-Voting(가칭) 시스템 도입 및 관련 규정 제정

제안

-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전당대회까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 선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식의 권리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당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비용 효율성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필요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수차례 전당원투표에 활용하면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해온 경험이 있음. 향후에는 외부 업체 연계 방식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자체 운영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인증 후 투표)이 필요함
- 전당대회만이 아니라 권리당원 지역위원회 총회,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 자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2) 블록체인방식 도입 등 당원명부 보안 능력 강화 3) 외부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보안검증 시스템 구축 4) 당원명부 관리 및 정보 접근권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2) 당원자치회 지원

현행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6장 당원자치회

제27조(구성)

제27조의1(준수의무 및 제한사항)

제28조(등록 및 관리 등)

제안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당헌 개정으로 당원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
- 중앙당 및 시·도당은 매년 예산 편성에서 당원자치회 지원 예산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당원자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제안

-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해외당원, 정책당원 이외 모든 권리당원은 지역위원회 소속을 의무화.
-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는 위임장 포함 총 권리당원 5% 참여로 성립.
-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선출직 대의원 선출(전국여성위, 전국청년위 등 전국위 활동 대의원 포함).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대의원은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
-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모임 최소 분기 1회 개최: 활동 보고 및 계획, 정책토론 등
-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연 1회 의무 개최.
- 연간 지역위원회 활동 보고 및 재정 보고 의무화.
- 중앙당은 시도당 홈페이지 개편을 지원, 시도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위원회별 게시판을 운영, 지역위원회는 월 1회 활동보고 및 안내, 재정상황 정보 공시 의무화.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참고: 영국 노동당
지역위원회 운영

HOW DOES THE LABOUR PARTY WORK?

YOUR BRANCH

- Your **local branch** is your first port of call for getting involved.
- Branches meet **once a month**.
- Any member who lives in the Ward can **submit and vote** for motions at meetings.
- Branches are run by an **Executive Committee** who are elected at the Branch Annual General Meeting (AGM).
- Branches also **elect delegates** who represent the branch in your CLP.
- The branch also chooses **Labour candidates** for local elections e.g. local councillors.



YOUR CLP

- Your **Constituency Labour Party (CLP)** meets monthly.
- These are either **General Committee** meetings (where all members can normally attend but only delegates from branches, affiliated trade unions or socialist societies can vote) or **All Member** meetings (where all local members can vote).
-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you will elect positions to the Executive Committee, which runs the CLP, including Chair, Secretary, Campaigns Officer, Youth Officer, Women's Officer and more.
- You will also elect delegates to Labour's **regional and National Conferences**, to other bodies and forums.

i YOUR LOCAL LABOUR PARTY ALSO ORGANISES ELECTION CAMPAIGNS FOR COUNCILLORS AND MPS AND CAMPAIGNS ON MANY DIFFERENT LOCAL ISSUES!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제안

- <시도당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시도당 위원장은 현행 대의원 50%, 권리당원 50%으로 선출
- 시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전국대의원으로 하되,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선출 대의원을 50% 이상으로 구성
- 시도당 위원장 선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
- 시도당 상무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으로 하고,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선출 대의원을 상무위원회 위원 중 70% 이상으로 함.
- 시도당 대의원대회 연 1회 의무 개최.
- 시도당 연간 활동 보고 및 재정 보고 의무화.
- 시도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월 1회 활동보고 및 안내, 재정상황 정보 공시 의무화.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제안

-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국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
- 전국위원회 추천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분야별 대의원(여성, 청년, 노동 등)들이 선출하여 구성
- 전국위원회는 소속 권리당원 모임을 분기 1회 개최: 활동 보고 및 계획, 정책토론 등
- 전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연 1회 의무 개최.
- 전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는 위임장 포함 총 권리당원 5% 참여로 성립.
- 연간 지역위원회 활동 보고 및 재정 보고 의무화.
- 중앙당은 중앙당 홈페이지를 개편, 전국위원회별 게시판을 운영, 전국위원회는 월 1회 활동 보고 및 안내, 재정상황 정보 공시 의무화.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 기능 강화

제안

- 중앙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선출직 대의원의 구성이 50%이상이 되도록 함. 선출직 대의원 구성이 50%가 되는 방법은 1) 현행 당연직 대의원 수를 그대로 두고 대의원 총수를 확대하는 방안 2) 당연직 대의원수를 줄여 선출직 대의원이 50%가 되도록 하는 방안 가운데 선택
- 중앙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위원은 2년 임기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여 구성
- 현재 당무위원회는 당헌 상 집행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월1회 개최되며 사실상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므로 대의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당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선출직 대의원의 구성이 50%이상이 되도록 함.
- 당무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위원은 2년 임기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여 구성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7)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명칭을 당헌 상 ‘전당대회’로 변경

제안

- 현재 당헌 상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당대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지칭하고 있음.
- 전당대회의 구성원은 2년 임기의 전국대의원으로 구성
-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선출직 대의원 비율이 70% 이상 되도록 함.
- 전당대회의 기능은 1)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 승인 2) 지역위원회 당원총회 선출 대의원 승인 3)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진행한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승인 4) 2년 단위 당 정책강령 투표 결과 승인 5) 당헌 당규 개정의 건 등으로 당헌 개정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1)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현행

선출공직자 평가 범주와 대상

1.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역활동, 공약이행활동, 기여활동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여활동
3. 광역/기초단체장: 도덕성 및 윤리역량, 리더십역량,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4. 광역/기초의원: 도덕성,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제안

- 선출직 평가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별도의 ‘도덕성/윤리’ 평가 항목을 두고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은 해당 평가 항목이 없음.
-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중 행하거나, 공천 당시 미확인 상태였으나 선출 후 확인된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평가해야, 다음 선거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마련됨.
-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의무 불이행, 투기성 자산운영,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 위반 의혹으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윤리 항목 신설을 제안함.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현행

- 국회의원은 별도의 공직윤리 항목이 없으며, 선출공직자 평가 결과만으로 공천배제 제재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제안

-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 관련 현행 법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공직윤리 평가 항목의 세부내용을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장 도덕성 평가 기준, 문재인 정부 임명직 인사 7대 기준 등을 참조하여 국회의원 공직윤리 평가 기준 마련에 활용함.
- 공직윤리 평가 대상 기간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당선 이후에 확인된 당선 이전 행위도 평가대상으로 포함해야 함.
- 공직윤리 항목 평가는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단일 항목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기준 미충족 시 공천 배제를 제안함.
- 예시> 총점 200점 기준 100점 미만 공천 배제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3) 22대 총선 당내경선,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방식 적용

현행	하위 0-10%	하위 10-20%	하위 20-30%	하위 30-100%
	감산 20% 일괄 적용		감산 없음	
현재 국회의원 평가 최고 감산 기준은 25%				
제안	감산 40%	감산 30%	감산 20%	감산 없음
탈당과 경선불복 해당자 등 감산 기준도 비례해서 조정안 마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하위 20%에게만 감산 20%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 책임 원리에 비추어 부족함.
- 하위 0-10% 구간 해당자에게는 감산 40% 규칙을 적용,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규칙을 적용하며, 탈당이나 경선불복자의 최고 감산 비율은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함.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4)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22대부터 불출마 의향자도 평가대상에 포함

현행

- 현재 선출공직자 평가는 2년 1회, 임기 중 2회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21대 1차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음.
- 제도 상 2번째 평가 및 최종 평가에서는 불출마 의향자 평가는 제외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패널티 적용을 위한 모수(母數)에서도 제외하고 있음.

제안

- 21대는 1차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을 권고함.
- 22대부터는 임기 중 2회 평가 제도는 준수하도록 권고함.
- 현역 국회의원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하더라도 광역단체장 선거, 대통령선거 등 다른 선출공직에 도전할 수 있으므로, 불출마 의향자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대신 상대평가 패널티 적용을 위한 모수(母數)에는 포함하지 않음.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5) 22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 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현행

- 현행 제도는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 하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4.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인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단수공천을 허용하고 있음.
- 21대 총선에서는 전략공천 11.1%, 단수공천 47.8%, 경선 41.1%로 진행되었음.

제안

- 현행 단수공천 허용 기준에서 3.4.조건을 제외할 것을 권고함.
- 21대 총선 경선 비중이 41.1%로 낮았는데, 당의 경쟁력이나 인력양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
- 당내 경선을 활성화하여 검증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당의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며, 당내 경선과정에서 3.4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최종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당의 인력양성에 도움이 됨.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6) 22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문자발송 회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회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현행

- 당내경선 후보자에게 동등한 문자발송,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개최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최회수나 방법, 동영상 게시방법 등은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위임하고 있음.

제안

-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선거구마다 다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불공정함.
- 규정을 개정하여 문자발송 회수,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개최 회수, 개최 방법을 명시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 경선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현역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규정으로 보장된 문자발송 회수를 초과하여 문자발송을 할 경우 경선위반행위로 제재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 당내경선의 최종 투표에는 일반국민도 참여하게 되므로,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 동영상은 당 온라인 플랫폼 외에 유튜브를 통해 상시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

7) 22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ARS투표는 보완적 활용

현행

- 22대 총선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모두 ARS투표로 하게 되어 있음
- ARS투표 시행기관의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당 선관위에서 결정함
-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적 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함.
-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함.

제안

- 비용과 투표자 접근성 측면에서 현재의 ARS투표방식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 투표로 바뀌어야 하며, 휴대전화 접근성이 낮은 투표자에 한해 보완적으로 ARS투표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유권자들의 휴대폰 이용 패턴을 고려할 때, ARS투표방식은 투표 접근성을 낮춤. 일정 기간 내에 투표자가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접속하여 인증,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1) 16~17세 당원의 초대

제안

- <청소년 당원을 초대합니다> 마련: 청소년 당원의 권리, 활동 안내
- 16~17세 당원 당비 면제
- 여름/겨울 방학 청소년 시민 대상 프로그램 정기 운영

<방법>

- 당 청소년 당원 + 청년위원회, <청소년 당원 프로그램 TF> 구성
- 직접 필요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기획
- 당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
- 홈페이지 별도 꼭지로 <청소년 당원 초대> 수록, <청소년 캠프>(가칭) 안내 등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참고: 덴마크 정당 Youth Camp



At the youth camp participants came up with fictional political parties. Each party came up with a logo, ideological stance and made a political campaign

덴마크 청(소)년 정당 캠프는 여러 정당이 함께 개최

참고: 노르웨이 노동당 Youth Camp



노르웨이 노동당은 자체 청(소)년 캠프를 운영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2)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 마련, 운영

제안

〈내용 예시〉

- 당원의 권리와 의무 안내
- 당원자치회, 지역위원회, 당대회 활동 내용 및 방법 안내
- 당원교육 프로그램 안내
-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안내
-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안내

〈방법〉

- 당원 가입 1년 이내 당원 공개모집으로 〈신입당원 매뉴얼 TF〉 구성
- 당원이 직접 필요한 내용으로 매뉴얼을 작성
- 당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
- 홈페이지에 별도 꼭지로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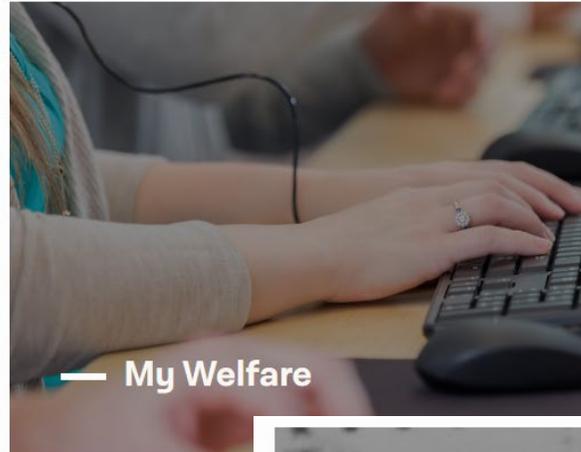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참고: 영국노동당 홈페이지 신입당원 Hub의 구성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참고: 영국노동당 홈페이지 신입당원 Hub의 구성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3)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제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치학교’, ‘리더십 학교’ 등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음.
- 250만 권리당원이 있고 기초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수임 경험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인만큼, 향후 지방공직에서부터 중앙공직까지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풍부한 인재가 필요함.
- 불가피할 경우 외부인재를 영입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정체성과 문화 속에서 공직 담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훈련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공직의 이론과 실무를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여 공직을 진로로 결정한 청년들이 당으로 들어와 도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4)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제안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6개월 이상 당비납부 당원)들을 위하여 재난안전보험 마련.
-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음(파주시, 광명시 등).
-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당원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방안 제안.
- 이를 통하여 당원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고, 시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

5.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불어민주당

1) 정책 중심 정당으로의 조직 개편

제안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닛)을 구성.
- 책임국회의원 협의체의 주1회 정례 브리핑, 책임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에서 정책실무협의 회 주도.
-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책임국회의원 가운데 지명)
-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
-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
-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정책 중심으로 개편

5.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불어민주당

2) 다양한 기구, 다양한 인력, 다양한 정책경험이 필요

제안

-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함
- 권리당원 250만 규모의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같은 규모의 당직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법 적용
- 과거 당직자 인원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 비해 회계투명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현실
-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려면 인재들의 활동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구와 활동이 필요

5.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불어민주당

3) 정책 허브 민주연구원, 정책보고회 제도화

제안

-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싱크탱크 위상을 가져야.
- 학계, 민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이 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게 디자인될 필요
- 민주연구원이 긴 호흡으로 이 기능을 수행해 나가려면 민주연구원장의 임기 보장 필요
- 더불어민주당은 일년에 한 차례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께 정책성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의견을 접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 현재는 야당이므로 집행력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 또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함.

6.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1) 미래대표, 2024년 총선의 주요기준이 되어야

제안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 해야함.
- 미래의제란 초저출생·초고령화 (ex.노인빈곤/복지, 지역소멸), AI/디지털전환과 미래노동 (ex.플랫폼 노동과 실업), 기후 완화 (ex.에너지전환) 및 기후적응 (ex.기후재난,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존,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
- 민주당은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함.

6.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이 선발하는 미래대표 국회의원

제안

- 미래 대표 국회의원이란 2024년 이후 한국사회 미래의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과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능력을 가진 의원을 말함.
- 국민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회정을 만들어야 함.
-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이 있는 누구나 예비후보로 참여 가능.후보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회가 참여 예정.

6.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3) 미래위원회 설치

제안

-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 위원회를 설치. 당내와 당 밖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이는 열린 조직
-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분과위원회 (임기보장 독립위원회)
- 주요 구성원: 미래대표 (원내), 미래 전문위원 (원내), 미래의제 전문가그룹원외), 미래 네트워크 조직 (원외)
- 당대표 직속 미래 아젠다 TF 당대표 직속 미래위기 대응 TF
- 미래 옴부즈맨 유닛: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하는 후속세대 옴부즈맨제도 도입
- 글로벌 미래 대응 네트워크

감사합니다